



예산춘추

BUDGET & POLICY

특집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 정책 과제

현안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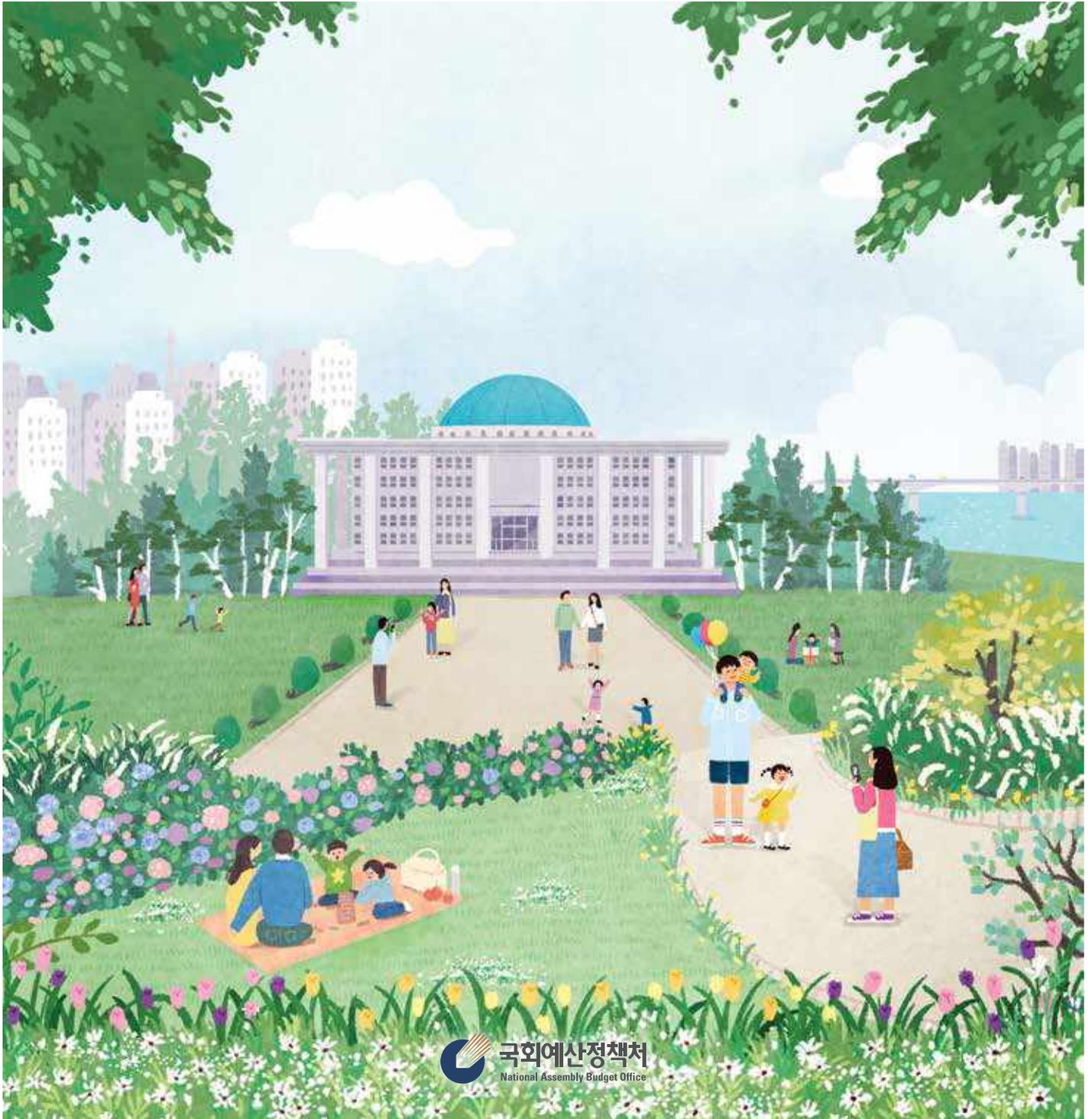
반도체 시장 패권 경쟁과 한국 경제
이주민 인구통태와 포용적 사회 조성 방안

Work & Report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NABO 발간보고서 소개

Fiscal Story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개선 방향



contents



특집

06

초고령사회와
국가재정의 과제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14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22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리 경제의 과제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현안 진단

32

반도체 시장 패권 전쟁과
한국 경제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36

이주민 인구동태와
포용적 사회 조성 방안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44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권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산춘추

BUDGET & POLICY
2024. VOL. 74

발행일 2024년 5월 10일(통권 74호)

발행인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춘추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위원 장석립 총무담당관

배아형 정책총괄담당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과장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허기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간사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편집 황록연 주무관

김홍준 홍보·공보 담당

이규민 예산분석관

김효진 추계세제분석관

홍선기 경제분석관



WORK & REPORT

54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경제성장률

임제웅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58

NABO 발간보고서 소개

64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68

NABO NEWS

FISCAL STORY

72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

양재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78

지방재정 이야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개선 방향

한재명 한신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86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특집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 정책 과제〉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저출생·고령화 및 경제 저성장세 지속 등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경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skyline, featuring numerous skyscrapers and buildings. The image is overlaid with a semi-transparent green filter. The text is center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초고령사회와 국가재정의 과제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리 경제의 과제

초고령사회와 국가재정의 과제



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2025년 노인인구 천만명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살펴보고, 재정수입 확보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의 재구조화 관점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조망한다.

“ 2025년은 고령사회 진입 후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해로, 출생아 수는 21.8만명, 노인인구는 1,051.4만명으로 예상 ”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의 저성장세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만 7년 만인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동일한 변화가 OECD 국가들은 평균 25년, 최고령 국가인 일본도 11년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은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압축적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어 온 합계출산율 하락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의 누적효과와 195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화와 기대수명 상승이 결합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시작으로 이후 보다 빠른 속도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 수 감소는 20~30년 후 가임인구 수 감소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며 가임인구 수 감소와 합계출산율 하락이 맞물림으로써 출생아 수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져 있다.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완료되며 2050년대 이후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노인부양의 사회적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

(단위: 명/100명, 만명)



그림 2 노인인구 수, 노인인구 비중, 노인부양비 추이

(단위: 명/100명, 만명)



주 1. 자료값 중 2022년까지는 실적치이고, 2023~2070년은 추계치임
 2. 노인인구 비중=(노인인구 수/총인구 수)×100, 노인부양비=(노인인구 수/생산가능인구 수)×1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2023)'를 이용해 저자 작성

“
2020년을 전후하여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연평균 60만명대에서
순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연평균 20만명대에서
순증가하여
재정불균형 상태를
초래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후 고령화의 심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로, 재정정책의 방향과 운용에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20년 기간을 비교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010~2019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가 모두 전년 대비 평균 20만명대의 증가세에 있었다. 반면에 향후 2020~2039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40만명대에서 생산가능인구는 이전 시기 대비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즉, 2020~2039년 전년 대비 평균 인구 증감폭은 2배가량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2020년을 전후하여 생산가능인구는 2010~2019년 대비 매년 연평균 60만명대의 순감소가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연평균 20만명대에서 순증가 하게 됨을 의미한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투입 감소와 경제규모 축소를 통해 국가의 재정수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반면에, 노인인구 증가는 노후소득과 의료·돌봄 등에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기대여명 상승에 따른 후기 고령인구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 1인 가구 급증 등 재정소요 부분이 크다. 이렇듯 수입과 지출 양방향의 상충적인 변화가 크고 지속된다는 데에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

초고령사회 재정의
지속가능 방안은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모색 가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재정은 수입이 지출을 상회해 왔으나, 2019년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인 후 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며 2022년까지 30~7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 경제의 성장세 저하 등의 영향으로 지출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대한 현재의 재정 규모와 재정 운용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초고령사회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은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다. 재정수입 규모는 미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확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생산가능인구의 확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수입원 확보, 조세와 사회보험의 국민부담률 인상 등의 방안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확보는 합계출산율 상승과 해외 이민자 유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안정적 확보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회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고, 출생 후 생산가능인구로 편입 시까지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인구 고령화가 크게 진행되는 2030~2040년대에 필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인력 유입이 불가피하다. 다만, 인력 유입

그림 3 기간 중 연평균 전년 대비 증감폭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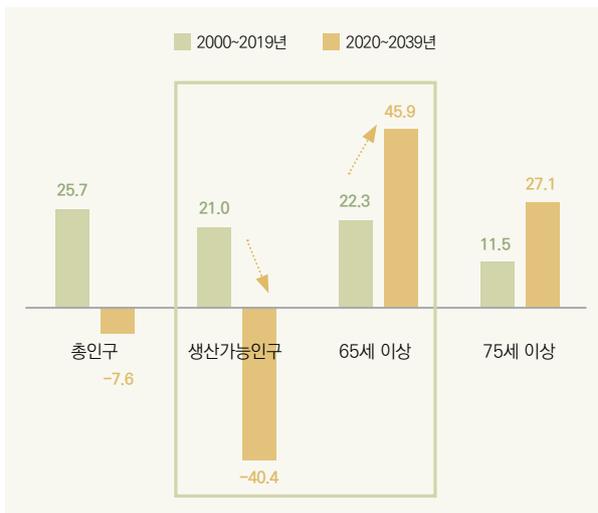


그림 4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생산가능인구
급감의 시기에 여성·
조기퇴직·전기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통한
노동공급 확보 필요
”

은 중장기적 계획 하에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겠다.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는 기술개발을 통한 동일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저출산이 장기화되면서 202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게 돼 노동 투입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필요하다. 주어진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인구와 조기 퇴직인구, 노인인구 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의 2022년 통계 기준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17.2%p로 38개 회원국 중 상위 7위로 높은 수준이고, OECD 국가들에 비해 30대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 뚜렷하다. 육아권 보장을 통한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의 빠른 퇴직으로 장년기 유희인력이 많다. 특히 2020년을 전후해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어,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노인인구는 1·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데, 기대여명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적 노쇠가 시작되는 건강한 노화와 병행될 수 있는 적절한 소득활동이

그림 5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격차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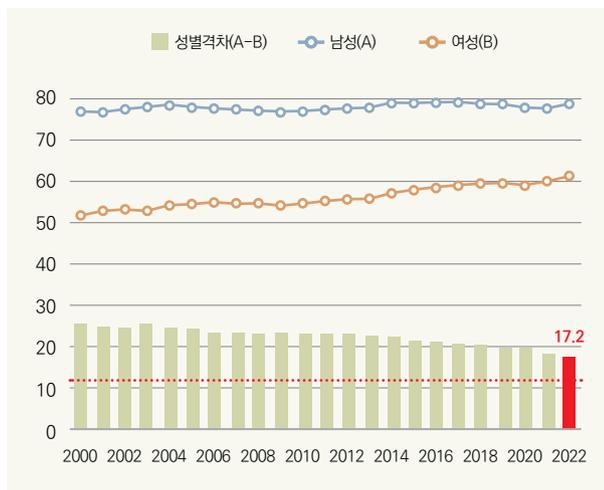


그림 6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 비중: 2021년 기준 (단위: %)



주 1.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수의 비율로 15~64세 인구 기준 값임
 2. 왼쪽 그림의 빨간색 점선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단순 평균값(10.4%p)임
 3. 오른쪽 그림의 ()의 값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국민부담률 값임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민부담의
적정 수준과 조세·
사회보험료·부(분)담금
등 재원 구조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가 실제의 고용상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인프라를 마련하고,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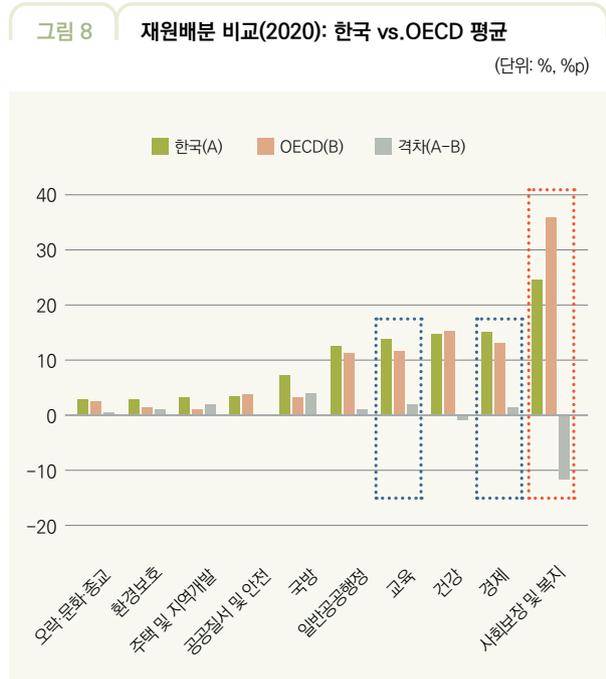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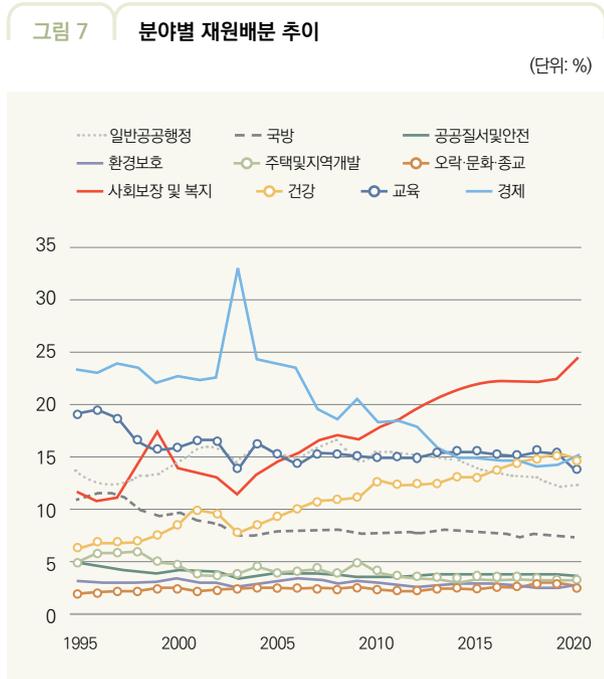
재정수입원의 확보는 디지털 기술발전이 주도하는 산업구조 재편과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비과세·면세의 과세 전환, 환경·건강 등 외부불경제 관련 교정과세의 도입·강화, 노동시장 이중화와 자산 양극화를 감안한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등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세와 사회보장 보험료를 통한 국민부담률 인상은 향후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부담 수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목적 재원의 성격을 갖고 가입자격에 기반하는 사회보험료와 일반 재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준조세가 되는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은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규모, 경제적 영향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재정수입원으로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효율화는 정부가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배분하는 사회적 투자전략에서 출발하고, 이를 운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한다. 국가의 재원 배분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반하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경제개발 시기를 지나 1990~2000년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경제와 교육 분야의 재원 비중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이후에는 사회보장 및 복지와 건강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원 배분 현황과 비교해 볼 때,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국방을 제외하면 교육과 경제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보장 및 복지, 건강의 투자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그동안 국가의 투자전략이 경제성장 위주로 이루어진 점과 OECD 주요국 대비 인구 고령화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이 작용한 결과로, 경제의 선진화와 향후 초고령사회의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사회보장 및 복지와 건강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원배분 비중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가족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중이 커질 것이고,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후소득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자연발생적으로도 대폭 확대될 것이다. 즉, 저출산·고령화의 양대 사회적 위험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 분야 비중(2024년 예산 기준 보건·복지·고용 비중 37.0%)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 비중의 감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국가의 재정투자 전략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인구구조 변화



주 OECD 통계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저자 작성



경제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노력이 필요



외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경제적 패권과 세계교역 위축, 감염 및 지정학적 위험, 국제 통화 긴축기조와 금리인상, 고물가와 디플레이션 위험 등은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경제의 높은 성장세를 이끈 저금리-저물가와와는 아주 다른 양상이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화와 근로형태 다변화, 가족 해체와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기에 경제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이 중첩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의 투자전략 재수립이 어려워지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OECD의 주요 선진국들은 1960~1970년대 사회보장과 복지의 팽창기 이후 오일쇼크와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1990년대 이후 사회보장 체계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및 노인의 의료·돌봄 서비스 체계 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통한 재원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다. 국가마다 제도와 재정체계가 다르고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같지 않아 개혁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경제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과 가족 지원 강화,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재구조화, 통합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이 높아진 점을 볼 수 있다. 주요국들의 앞선 경험과 개혁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밑거름으로 하여 초고령사회와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대응 계획의 수립과 실행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이다. 🌐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



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조세정책은 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자원조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재원은 여러 세목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세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인상이다. 소득세 또한 낮은 소득구간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기본공제 확대, 선택적 부부 또는 가구단위 과세 도입 등으로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정책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회를 활용하고, 탄소세 도입 등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며, 조세특례의 효율화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 국제화로 인한 과세환경 변화 등 조세정책과 영향을 주고받는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다. 그중 본고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른 환경 변화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정책은 국민 간의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재정과 국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말미에 디지털 전환 대응, 기후위기 극복,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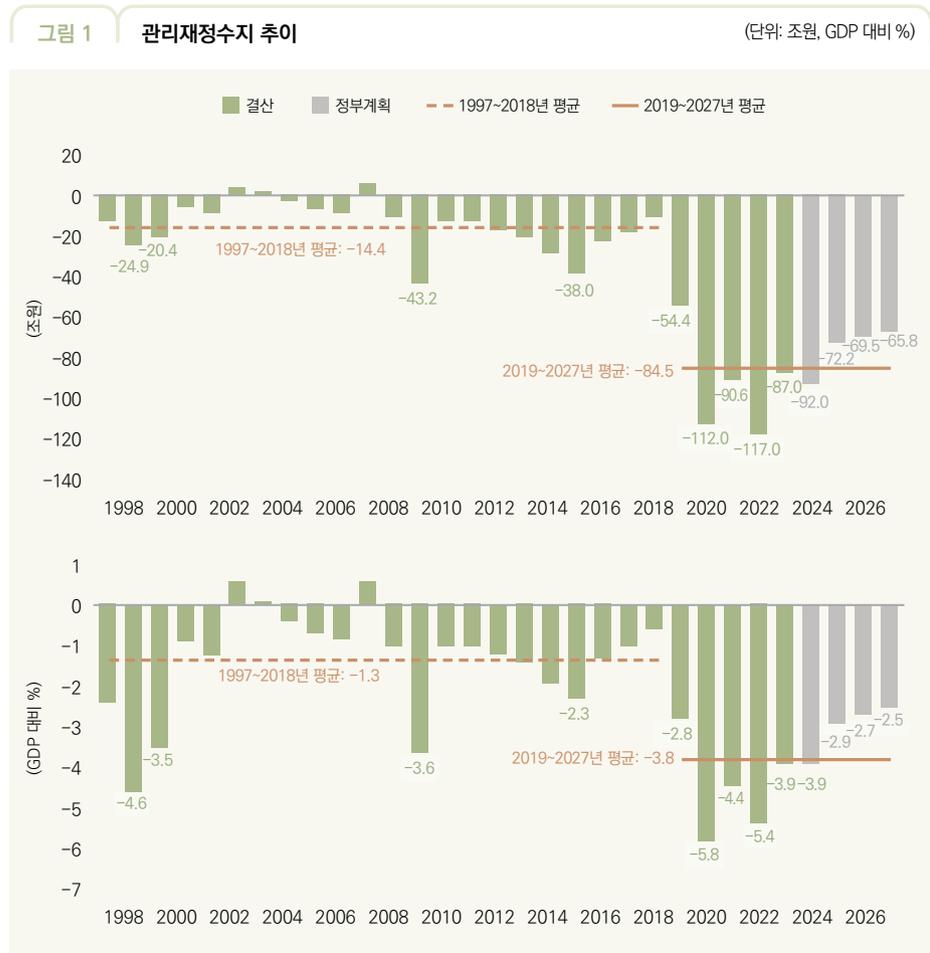
조세의 자원조달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의 사회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는 바이다. 따라서 재정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향후 증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증세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고 그 시기를 먼 미래, 또는 최소한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지출과 비교해 재정수입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까



지 고려하면 2019~2027년까지 9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평균 84.5조원(GDP의 3.8%)에 달한다. 물론 이 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여파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모습이다. [그림 1]에서 재정적자 규모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계획이며, 경제위기 등으로 재정적자의 규모는 더 커질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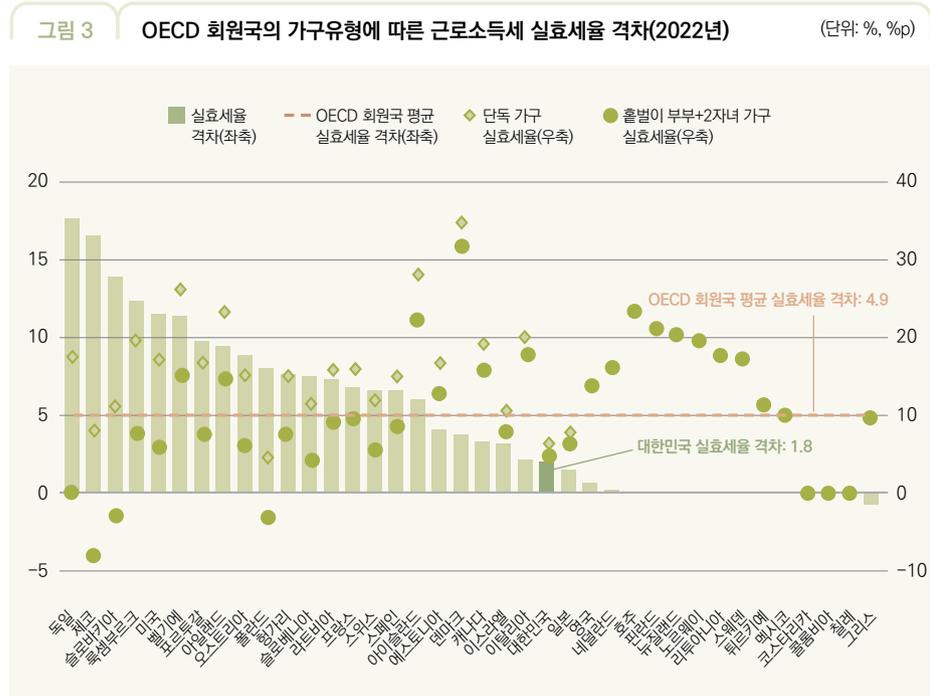
자료 1.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4. 4. 11.
 2. 대한민국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9.
 3.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접속: 2024. 4. 1.>

증세는 시기의 문제이다. 이른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그 속도를 조절하며 증세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너무 늦은 시기에 증세를 시작하면 증세는 급격해질 수밖에 없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과 동시에 경제적 왜곡도 클 것이다. 또한 증세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현재의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없이는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현재의 은퇴연령계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 부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세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그 개혁의 내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그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소득에 역진적인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이 커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강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올해에는 0.7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저출산은 재정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따라서 정부의 여러 정책이 더욱 가족친화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정책 중에는 조세정책도 포함된다.



“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부부 또는 가구단위 과세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 ”

가족친화적 조세정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세목은 소득세이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임금을 받으며 3명(배우자와 자녀 2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이 없을 때보다 소득의 1.8% 정도 소득세를 덜 부담한다. 하지만 이러한 격차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4.9%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족지원 기능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미약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족지원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등 다른 기능도 미약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낮은 소득구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부가 가치세처럼 소득세 또한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적공제의 확대이다. 인적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가 있다. 따라서 기본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소득세가 현재보다 더 가족친화적이 된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대상자인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중복해 신청할 수 없어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소득세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현재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2009년부터 15년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약 기본공제를 두 배 이상 대폭 인상한다면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해 자녀에 대한 세제지원은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인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보편적 지원은 아동수당과 같은 재정지원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인적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제도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득세를 부부 또는 가구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부부단위의 신고는 결혼, 그리고 가구단위의 신고는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개인단위로만 신고할 수 있지만, 미국은 부부합산 신고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N분N승제¹⁾를 택하고 있다. 소득과 소비의 경제적 기본단위는 가구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사회복지 제도들은 대부분 가구단위로 설계되어 있다. 가구의 담세력이 가구 소득 총액으로만 결정된다면 부부 또는 가구단위의 과세가 능력과세의 원칙

1) N분N승제는 가구의 전체 소득을 N으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N을 곱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N은 가족계수로 가구원 수 등 가구 구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 밖의 조세정책 과제

에 부합한다. 다만 부부 또는 가구단위의 과세는 부소득자의 경제활동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앞으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부 또는 가구단위의 소득세 신고를 허용한다면 부소득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미래의 환경 변화에 조세정책이 대처해야 할 것들은 다양하다. 이에 대해 세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조세정책의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한다. 대량의 과세 정보 생산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 및 기계학습의 발전은 과세행정의 효율화와 과세기반의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근로, 거래, 소득, 자산의 등장과 새로운 형태의 조세피난처가 될 수 있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의 출현으로 과세의 사각지대와 비공식 경제가 커질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과세에 관한 연구와 입법 등으로 위기에 잘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또한 조세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산업 부문의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자에게는 배출권거래제가, 그리고 가정과 같은 소규모 온실가스 배출자에게는 탄소세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과세가 수송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세율체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송부문을 포괄한 에너지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에너지세를 부과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인공지능, 항공·우주, 미래형 교통·통신, 로봇,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핵심 기술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세정책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성장 동력을 높이는 산업에 참여하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기업의 R&D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출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세특례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요인들은 없



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생태계를 적시에 반영하는 데 적합한지, 혹은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조세특례가 효율성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마치며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유명한 말은 미국 독립전쟁의 슬로건 중 하나였다. 투표권이 없는 지금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은 현재의 정책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만약 공상과학 영화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의 후세대들은 아마도 현재로 이동해 현 세대에게 독립된 국가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와 더불어 조세정책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회를 살리면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술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데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우리 경제의 과제



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졌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동력 확충과 경제구조 개혁, 이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역동성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던 1980년대를 기억하는 국민에게는 충격적인 수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감안하면, 1%대 성장률을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실적치와 추세를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추세를 기준으로 보면 1990년에 9%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3년에는 2% 정도로 낮아졌다. 이처럼 장기간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 추세가 앞으로 반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낙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하락한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세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전망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세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 경제성장률 실적치와 추세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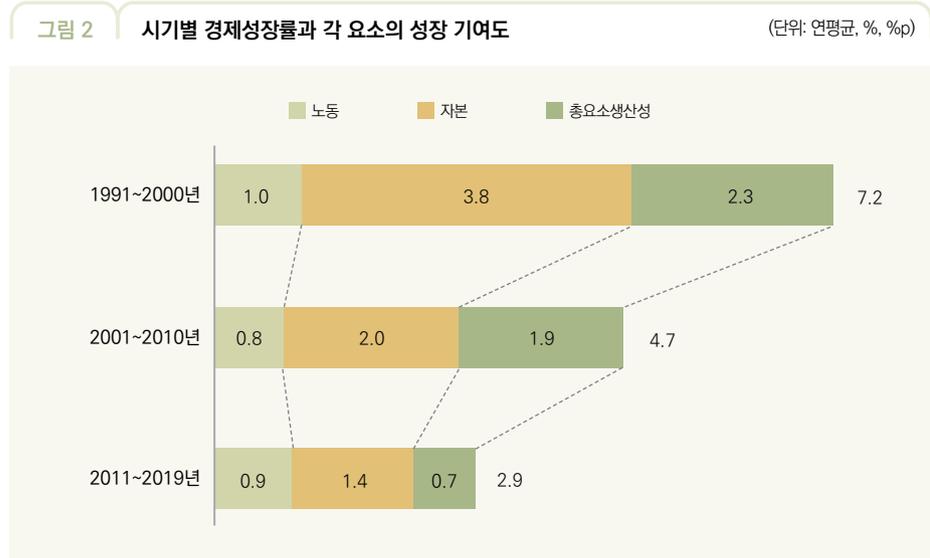


주 경제성장률 추세는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이용해 계산함
 자료 한국은행, 저자 계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원인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성장회계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성장회계란 경제성장률을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생산요소와 국내총생산 간 비율로 정의되는데,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적은 생산요소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2001~2010년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자본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했다. 1990년대는 경제발전 초기로서 경제에 자본이 희소했으므로 투자가 활발했던 시기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외환위기에 빠진 한 원인

으로 대기업의 과잉투자가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2001~2010년의 자본증가세 둔화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2011~2019년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했다. 이는 우리 경제 효율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았다. 반면 노동 투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p 정도로 일정했다. 이는 2019년 이전에는 생산 연령층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투입은 비교적 원활했음을 나타낸다.



주 반올림과 비선형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총합 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김지연·정규철·허진욱,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 전망

경제성장은 국내 소득과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국민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세금, 국민연금 납부금 등이 소득에 연동되어 정해진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국가재정과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아울러 장기적 시각에서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보자.

장기경제성장률을 전망하려면 성장회계에서처럼 생산요소(노동, 자본)와 총요소생산성을 예측해야 한다. 먼 미래에 발생할 단기적 충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성장률 추세에 대한 예측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과도 동일한 개념이다. 향후 노동 투입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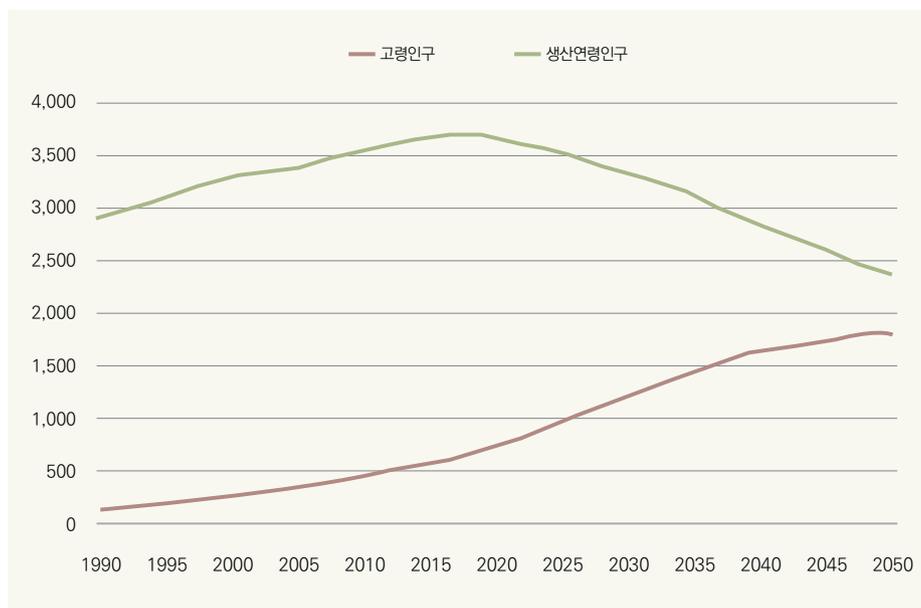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

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에는 3,763만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2,445만명으로 35% 정도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9년 769만명에서 2050년 1,891만명으로 146%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이 장기간 이어지고, 기대수명은 연장됨에 따라 나타나는 고령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앞서 [그림 2]에서 보았듯이, 노동 투입이 과거 우리 경제성장률에 1%p 정도를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 투입의 성장에 대한 기여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그림 3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 수 전망

(단위: 만명)



주 중위시나리오 기준이며,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는 각각 15~64세, 65세 이상 인구를 뜻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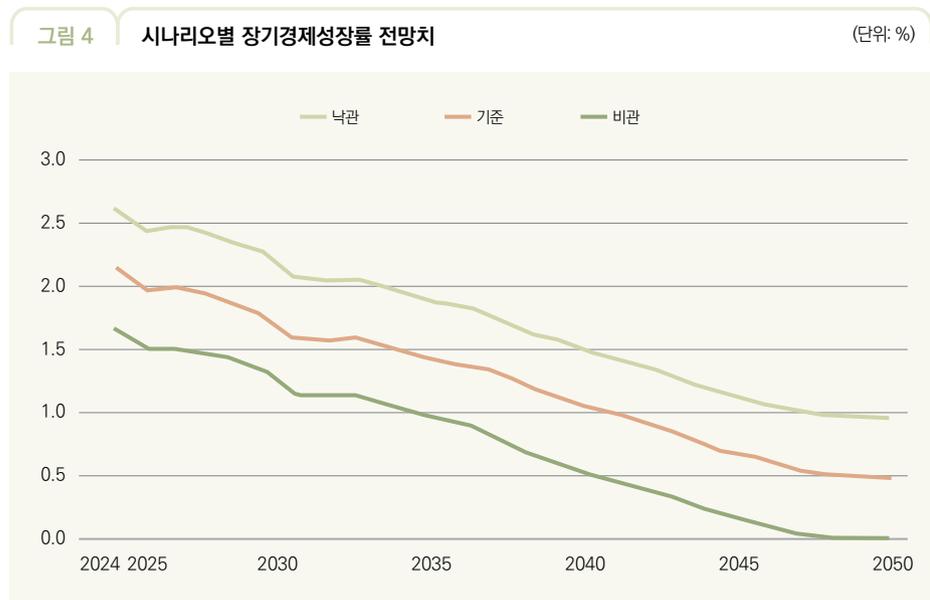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해 왔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다. [그림 2]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 위기 직전까지 보면 2011~2019년에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0.7%에 불과했다. 이는 그 이전 기간인 2001~2010년의 1.9% 증가율보다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향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경제구조 개혁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2011~2019년의 낮은 총요소생산성이 해당 기간의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또한 존재

“
 각 시나리오를 보면
 장기간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다. 통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성 증가세가 낮은 경향이 있다. 2011~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1980년부터 자료가 가용한 32개국) 중 소득수준이 하위 32.2% 수준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상위 32.2%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1.0% 해당한다. 따라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보다 높은 1.0%로 전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OECD 상위 25%에 해당하는 1.3%로 전제했다. 한편,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의 낮은 수준인 0.7%를 유지한다고 전제했다.

인구구조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제를 기반으로 연령별 취업자 수를 전망하고, 자본 수익률을 바탕으로 자본스톡을 전망했다(자세한 사항은 김지연·정규철·허진욱[2022]을 참조). [그림 4]는 전망 결과를 나타낸다. 기준 시나리오를 보면, 최근 2.0% 수준에 있는 장기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간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뜻한다.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제성장률 수준은 다르게 나타났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경제가 1.0%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경제성장률이 0%, 즉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예측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이



자료 김지연·정규철·허진욱,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다. [그림 5]는 각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보여준다. [그림 2]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노동 투입의 성장기여도이다. 과거에는 1%p 수준이었던 노동 투입의 성장기여도가 2023~2030년에는 0%p로 축소되고, 그 이후에는 경제 규모를 오히려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축소되는 노동력은 자본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자본스톡의 성장기여도까지 하락시킬 것임을 알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이 앞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림 5 시기별 경제성장률과 각 요소의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연평균, %, %p)



주 반올림과 비선형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성장기여도 총합 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김지연·정규철·허진욱,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22 하반기

역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성장잠재력 축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해 보자. 향후 노동력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노동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노동력 감소의 주요인인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당장 출생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지금 태어난 아기가 우리 경제에 노동을 공급하기까지 통상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출생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에서 생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여성층이 많이 있다. 일·가정양립 정책은 출생률 반등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므로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년제도, 경직적 임금체계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력 수용은 단기간에 노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앞 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모든 시나리오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지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총요소생산성을





외부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술 향상 속도이다. 과거 우리 경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전략은 유효성을 잃어간다. 오히려 후발국의 기술 추격에 직면하게 된다. 외부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교육제도가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례로, 각 대학이 수요에 맞추어 전공별 학과 인원을 조정해야겠으나, 학과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교수진의 반발로 무산된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한 경제가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보유하고더라도 이 생산자원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분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 희소한 자원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에 머무를 경우 유망한 신생, 혁신기업은 오히려 생산자원 부족을 겪는다. 한 경제의 생산자원은 금융시장을 통해 배분될 수 있는데, 정책금융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계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 전체로는 역동성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쟁에 직면한 기업은 수요에 맞추어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더 커질 뿐 아니라, 신생기업이 더 활발히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국내 손꼽히는 제조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국내 서비스업은 다양한 규제의 보호를 받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서비스업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으나,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무산됐다.

마치며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구조 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성장세 하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외국인력 수용, 진입장벽 축소, 규제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그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현 상태에 머무르며 경제 역동성 저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험난하지만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성을 강화할 것인가는 우리 국민이 선택할 문제일 것이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현안 진단



반도체 시장 패권 전쟁과 한국 경제

이주민 인구동태와 포용적 사회 조성 방안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반도체 시장 패권 전쟁과 한국 경제



글.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1948년 미국 벨랩에서 트랜지스터 개발로 시작해 1970년대까지 미국이 주도했다. 1980년대 PC의 등장과 1990년대 글로벌 분업 체계 발달로 일본이 중심이 되었으나,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IT 산업의 변화와 함께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제적 한계로 인해 무어의 법칙에 도전받고, 치킨게임으로 인한 업계의 재편이 일어났다. 현재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며, 국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혁신, 글로벌시장 대응, 파운드리 산업 다각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재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춰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

반도체 산업은 1948년 미국 AT&T 산하 연구소인 벨랩(Bell Lab)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트랜지스터(Transistor)를 그 효시로 삼는다. 그 이후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은 1970년대까지 약 30년 동안 사실상 미국이 주도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개인용 컴퓨터(PC)의 등장, 그리고 1990년대 이래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무게중심은 일본으로 이동했다. 이는 전자공업과 정밀기계류에서 노하우를 쌓은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용 전자제품에 탑재될 고성능 반도체의 대량 생산에 있어 수율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키며 생산 원가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보급, 2000년대 모바일 시장의 등장, 201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 그리고 2020년대 들어 딥러닝을 위시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각 시대에 따라 IT산업 성장 동력의 세대교체가 지속돼 왔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더욱 고도화되며 무게중심이 일본에서 다시 한국과 대만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급격한 경제 규모 팽창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은 1987년에 창립한 TSMC를 위시로 주로 파운드리(위탁 반도체 생산업)와 패키징 산업에 치중한 생태계를, 한국은 역시 1980년대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데뷔해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램(DRAM)이나 낸드플래시(NAND Flash) 같은 메모리반도체에 집중된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대 본격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데뷔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조 공장이라는 규모의 경제와 반도체의 자급화라는 양대 동력을 기반으로, 이제 중국은 가장 큰 글로벌 반도체 소비 시장이자 가장 생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초중반 이후, 반도체 업계의 금언처럼 작용해 왔던 이른바 무어의 법칙(Moore's Law)¹⁾이 기술적·물리적·경제적 한계에 봉착하고, 메모리반도체 산업에서는 연이은 원가 출혈경쟁이 횡행하면서 많은 기업이 이른바 치킨게임(Chicken Game)²⁾을 거듭한 끝에 인수·합병되거나 폐업하는 등 명멸하는 변화가 보인다. 일례로 메모리반도체 시장 중 디램 시장은 과거 영화를 자랑하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전멸한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의 과점 구도로 정리됐다. 낸드플래시 시장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나머지 시장을 일본의 키옥시아,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같은 업체들이 분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생산에 대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2010년대 이후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이며 삼성전자, 인텔이 나머지 시장을 양분하는 형국이다.

1)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한 것으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

2)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

그러나 2020년대 들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 분업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조정이 아니다. 즉, 더 이상 경제 논리만이 주요 변수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사이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가 중심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격변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속 모색 마련

미·중 사이의 반도체 패권 전쟁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만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재설정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및 무역 제재는 2020년 바이든 정부로 바뀐 이후 더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더 세밀한 층위에 걸쳐 다각도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의 진보와 글로벌 점유율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자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 장비 등의 수출 통제,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같은 자국의 동맹국 혹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을 동원해 대중국 견제 포위망을 공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미·소 간 냉전이 극한으로 치달던 시절, 미국이 자국의 동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통해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 및 기술품의 수출을 통제하던 코콤(COCOM)의 등장을 예견하게 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 및 기술 제재에 대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 보호를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볼 수 있는 패키징과 반도체 생산 전문 장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해 반도체 굴기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정부 차원의 펀드 확보와 투자 규모를 늘리고,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는 반도체 산업의 전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을 통한 자국산 반도체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은 반도체의 해외 수출 혹은 생산을 통해 국부를 창출해 온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최대의 불확실 요소가 되고 있다. 반도체는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수출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이며,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팹,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기에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격화는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다. 이렇게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전략적, 안보적 관점에서의 반도체 패권 경쟁 환경 속에 한국의 대외 경제 정책은 보다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 옵션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먼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을 조금씩 완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존 디램이나 낸드플래시 같은 범용 반도체에서의 설계 및 제조 기술 혁신은 물론, AI 반도체의 핵심 메모리로 각광받고 있는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볼 수 있는 패키징과 반도체 생산 전문 장비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운드리 산업은 AI 반도체를 위시로 앞으로는 더욱 팹리스 고객사들의 수요 맞춤형 칩 생산 방향으로 변모가 예상되는데, 한국은 이러한 파운드리 산업을 최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레거시 공정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표준을 이끌고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양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출범시켜야 한다. 대내 경제 정책으로 한국 정부는 2045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구축하려는 반도체 메가팹 벨트 배후 시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RE100 같은 제조업 분야의 탄소 중립 요건 충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대용량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외의 글로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 메가팹 클러스터를 공동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와 산업 기반, 특별법 등의 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공정과 설계를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정부 지원의 R&D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기초과학 강국과의 해외 공동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술 IP를 확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산업적으로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주민 인구동태와 포용적 사회 조성 방안



글.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현황 파악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는 약 226만명으로 전체 한국 인구의 4.4%에 해당한다. 다양한 출신 국가와 거주 목적을 가진 이주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 조성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민이란 누구인가

“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칭하는
법정부적 용어로
‘이주배경주민
(약칭 ‘이주민’)’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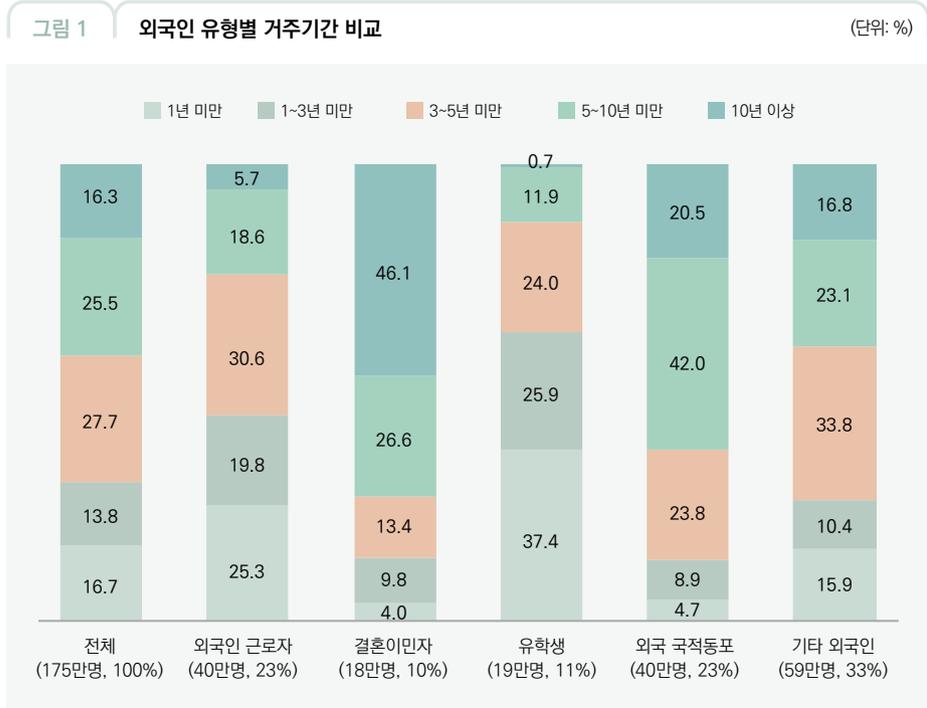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175만명, 귀화자의 수는 약 22만명이다(행정안전부, 2023). 부모가 귀화자이거나 부모 중 1인이 외국 출신이지만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다문화가족 자녀)이었던 미성년자의 수도 28만여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들을 포괄해 ‘외국인 주민’이라고 칭하는데, 이 외국인 주민의 수는 총 226만여명, 전체 한국 인구의 4.4%에 해당한다. 부모 중 1인 이상이 이주민이지만 본인은 선천적 한국 국적자인 성인의 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이들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인 주민’에 외국 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칭하는 법정부적 용어로 ‘이주배경주민(약칭 ‘이주민’)’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국민통합위원회, 2023).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사용하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합하며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용어 대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 인구 현황

외국 국적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23.0%)와 외국 국적 동포(22.7%)이다. 전체 외국 국적 이주민 중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은 28만 5천여명에 달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10년이 넘은 귀화자들도 11만 7천여명으로 한국으로 이주해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적지 않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결혼이민자 중 46.1%는 한국인의 가족으로 10년 이상을 거주했고, 외국 국적 동포(20.5%), 외국인 근로자(5.7%) 중에서도 1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 상당하다.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외국 국적 이주 아동·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19세 이하 외국 국적 아동·청소년의 숫자¹⁾는 2017년 약 6만명에서 2022년에는 약 10만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부나 모가 이주한 한국 국적 아동·청소년과 합치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는 40만명에 조금 못 미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증가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데, 2023년 전체 초중고 재학생 중 3.5%가 이주배경 학생이다(교육부, 2023).

이주민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한국계 중국 출신이 가장 많지만, 이주민 유형별로는 상위 출신 국가 순위와 비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외국 국적인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계 중국인(30.1%)이며, 베트남인(11.9%)과 중국인(11.7%), 태국인(9.3%), 우즈베키스탄인(3.9%)의 순이다. 귀화자 중에서도 한국계 중국 출신이 가장 다수(44.0%)이지만 베트남 출신(22.6%)과 중국 출신(18.5%)이 차지하는 비율도 외국 국적 이주민 중 해당 국적자의 비율보다는 더 높다. 필리핀, 캄보디아 등 결혼이주민이 많은 국가 출신이 그 뒤를 잇는다. 반면 다문화가족 미성년

1) 해당 연령대의 외국인 유형 중 한국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은 제외한 숫자임

“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주민 인구가 전체 주민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민의 20% 이상이 이주민인 지역도 있다.

자녀 중 가장 다수는 부나 모가 베트남 출신(34.5%)이며, 중국(17.7%), 한국계 중국(13.5%), 필리핀(8.1%) 출신 순서로 비율이 높다. 개별 체류자격별로 분석하면 출신 국적의 분포는 더 복잡해지는데,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내부적 다양성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출신 국적별 이주민 현황

(단위: 명, %)

외국 국적 이주민		귀화자		부모 중 1인 이상 한국인인 이주배경 미성년자 ¹⁾	
국적	인원(비중)	출신 국적	인원(비중)	부모 출신 국적	인원(비중)
한국계 중국	527,325(30.1)	한국계 중국	98,477(44.0)	베트남	103,295(34.5)
베트남	209,373(11.9)	베트남	50,660(22.6)	중국	53,036(17.7)
중국	204,150(11.7)	중국	41,413(18.5)	한국계 중국	40,282(13.5)
태국	163,311(9.3)	필리핀	10,295(4.6)	필리핀	24,176(8.1)
우즈베키스탄	68,848(3.9)	캄보디아	4,946(2.2)	캄보디아	12,294(4.1)
미국	58,203(3.3)	대만	4,807(2.1)	미국	11,382(3.8)
캄보디아	44,536(2.5)	몽골	1,938(0.9)	일본	8,945(3.0)
필리핀	44,093(2.5)	미국	1,225(0.5)	태국	6,162(2.1)
네팔	42,398(2.4)	우즈베키스탄	1,211(0.5)	우즈베키스탄	4,043(1.4)
인도네시아	40,466(2.3)	태국	1,203(0.5)	대만	4,015(1.3)
전체	1,752,346 (100.0)	전체	223,825 (100.0)	전체	299,440 (100.0)

주 1) 본인이 외국 국적이나 귀화자인 자녀는 앞의 두 열에 이중으로 집계됨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국가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주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주민 인구가 전체 주민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민의 20% 이상이 이주민인 지역도 있다(행정안전부, 2023). 이주배경 학생이 재학생의 30% 이상인 학교는 전국에 71개교이지만, 이들 중 31개교(44%)가 5개 시군구에 집중돼 있는 현상도(교육부, 2023) 이주민을 일상에서 접하는 정도가 거주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정 국가 출신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밀집해 사는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거주 지역이 형성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주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주민과의 지역 생활 시간대가 달라 실제 마주치는 일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허정원·장주영, 2020).



이주민에 대한 태도

한국이 이주민 수용국이 된 역사는 아직 길지 않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광부·간호사 파견, 남미 농업 이민, 중동 건설노동자 송출 등 한국은 ‘나가는 이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송출국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에 결혼이민자, 고용허가제 노동자, 재외동포 등 외국인 유입 관련 제도가 정비됨으로써 바야흐로 ‘들어오는 이민’의 규모가 ‘나가는 이민’보다 커지게 됐다(OECD, 2019).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태도 형성이 이주민 유입의 속도와 발맞추기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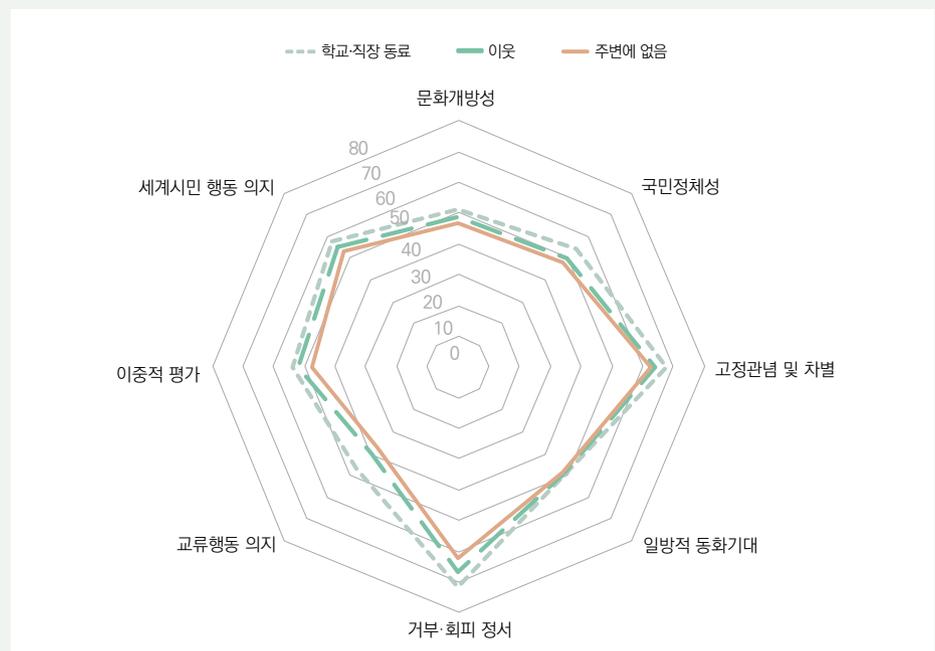
이주민 유입 규모가 확장되던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교육, 홍보, 제도 시정 등을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하지만(제18조), 성인인 국민이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 정도만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동 조사에서 주변에 이주민인 가족, 지인, 이웃 등이 전혀 없는 이들의 비율도 약 72%로 집계돼 이주민과의 교류 자체가 없는 이들이 여전히 다수이다.

“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섭된 이주민에 대해서는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게 한다.

주변에 이주민이 없는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민 지인이 있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여성가족부, 2022). 이주민이 학교나 직장 동료이거나 이웃인 경우처럼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이주민을 접하는 이들과 비교하더라도 주변에 이주민이 없는 이들은 대체로 다문화 수용성의 모든 영역에서 수용성이 더 낮다. 교류행동 의지 영역은 2015년 이래 성인 조사 결과에서 가장 수용성이 낮은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주민이 주변에 없는 이들의 교류행동 의지가 매우 낮은 것은 물론이고 이주민 이웃들의 교류행동 의지 수준도 이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이 이웃이어도 상관없다는 응답 비율은 70%를 넘어섰지만, 이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낮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 이주민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 거부나 회피 정서는 약화되고 있으나 이주민과 어울리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주변의 이주민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주민 동료가 있는 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섭된 이주민에 대해서는 더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이주민 지인 여부에 따른 영역별 다문화 수용성

(단위: 점)



주 이중적 평가,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영역은 문항 점수를 역으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2021) 결과를 이용해 저자 작성

이주민 포용과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은 “모두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즉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UN 경제사회국은 사회통합을 “모든 개인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안정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포용은 “모두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즉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주민의 사회적 포용 방향성에 대한 국제적 추세는 이주민의 지역주민성 강조를 통한 포용 사회 조성이다. 지역사회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일상생활이 교차하며 교류가 발생하는 실질적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국적과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 처우의 위계를 구성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에게 더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주민을 포용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①지역사회의 단결과 사회통합 증진, ②사회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의 감소, ③공공분야에의 동등한 접근성 보장 강화가 대표적인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Benton et al., 2018) 이를 위한 각종 사회통합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선주민-이주민 관계가 단순한 공존(Coexistence)이 아닌 공생 관계(Symbiotic Relationship)임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내의 이주민 참여 증진과 필수적 사회서비스 정책 포섭이 지방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에서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노동시장, 스포츠, 문화 영역은 물론이고 정책 제안 등의 시민적 참여 보장으로까지 확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동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이다.



장하고 있는데, 이주민의 적극적 지역사회 참여 보장은 이주민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선주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또한 이들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최근 국내 사례로는 외국 국적 아동의 보육, 유치원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아 학비나 보육비 지원 대상이 국민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영유아 시기의 공보육, 공교육 참여가 이주배경 아동의 문화 습득과 지역사회 적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을 보육·교육서비스 대상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영유아기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외국 국적 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아동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이러한 정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OECD, 2021). 모든 사회구성원이 더 안정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주민 포용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관계부처 합동, 2023.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23.
-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3.
- 허정원·장주영, “코로나19 확산 시기 서울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특성과 생활인구 변화”, 「공간과 사회」, 73권, 2020.
-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2.
- OECD, *Recruiting immigrant workers: Korea 2019. Recruiting Immigrant Workers*, Paris: OECD Publishing, 2019.
- OECD, *Young people with migrant parents: Making integration work*, Paris: OECD Publishing, 2021.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성장기반과 경제·사회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고려해 ODA 자원 확대와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협력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전략적 운용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이후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예산의 확대와 함께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을 크게 강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원조규모는 2010년 DAC 가입 당시 12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28억달러로 확대되어 31개 회원국 중에서 1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자국 중심주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취약성 심화로 개도국의 성장기반과 경제·사회적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 간 분쟁,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식량,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취약국가,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와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경제적 위상에 걸맞는 ODA 규모 세계 10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ODA 확정액 규모를 6.3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와 같이 2023년보다 1조 4,858억원이 확대되어 원조예산은 전년 대비 31.1% 증가하고, 총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기반 확충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전략적 ODA를 위한 추진 체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

“
ODA 예산의 확대와
함께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기반을 크게
강화해야
”



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ODA 통합과 조정을 강화해 왔으나, 부처별로 예산 편성과 집행이 독립적으로 수행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 사업조정 및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절화된 ODA 사업추진으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접근 미흡, 수원국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취약해지고 있는 바, ODA 사업의 집행점검과 현지사업 관리 내실화 등 ODA 성과 제고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개발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적 보편가치(International Value)와 국가적 이해관계(National Interest)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이 중요하다. 최근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GNI 대비 ODA 규모를 0.3%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ODA 예산의 확대와 전략적 운용을 위해서는 양허성 차관과 정책금융을 연계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혼합신용을 통해 인프라, 기후변화 관련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ODA	3,048.2	3,200.3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양자간원조 (비중)	2,387.7 (78.3)	2,493.8 (77.9)	2,775.0 (81.0)	2,926.1 (77.9)	3,115.7 (79.1)	3,673.9 (76.9)	5,128.2 (81.9)
유상원조 (비중)	1,058.1 (44.3)	1,141.2 (45.8)	1,184.9 (42.7)	1,285.2 (43.0)	1,230.5 (39.5)	1,503.0 (40.9)	2,032.0 (39.2)
무상원조 (비중)	1,329.6 (55.7)	1,352.6 (54.2)	1,590.1 (57.3)	1,667.9 (57.0)	1,885.2 (60.5)	2,170.9 (59.1)	3,096.2 (60.4)
다자간원조 (비중)	660.5 (21.7)	706.5 (22.1)	651.9 (19.0)	828.2 (22.1)	822.6 (20.9)	1,103.2 (23.1)	1,134.7 (18.1)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4.2.),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9쪽 참조

개발금융 확대와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국제분쟁 등으로 개발재원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동 대응과 민간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재원수요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영향 등으로 UNCTAD는 2022년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부족분이 2.5조달러에서 3.6

“
개발금융으로
시장에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



조달로 확대됐다고 밝혔으며, OECD의 경우에는 이를 더욱 상회하는 4.2조달러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22년 기준 국제사회의 ODA 규모가 2,11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개발재원 소요규모는 공적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

이와 같이 정부 재정만으로 막대한 개발도상국의 투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선진공여국들은 과거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그 격차를 민간재원 조달 없이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ODA 재원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 발굴 등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신흥국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PPP 사업 지원을 통해 대형·유망사업을 발굴하고 ODA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원방식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고양허성 차관²⁾ 외에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성 차관, 보증 지원, 지분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1) 2022년 DAC 회원국의 ODA는 우크라이나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 처리 및 수용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사상 최고치인 2,110억 달러로 증가했고, GNI 대비 0.37% 수준임.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 참조

2) 양허성 차관은 소득그룹별로 증여율 기준이 최저개발국을 포함한 저소득국 45% 이상, 하위 중소득국(LMICs) 15% 이상, 상위 중소득국(HLMICs) 10% 이상임. 일반적으로 고양허성 차관은 증여율 50%이상이고 저양허성 차관은 10~40% 수준임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 중요성이 확대되고 ODA 재원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재원과 정부재정을 적절히 조합해 위험에 따라 상업금융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전통적 ODA로는 공여국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등 정책적 목적하에 개도국 사업의 위험을 정부 지원으로 커버해 상업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국내 개발재원 확대 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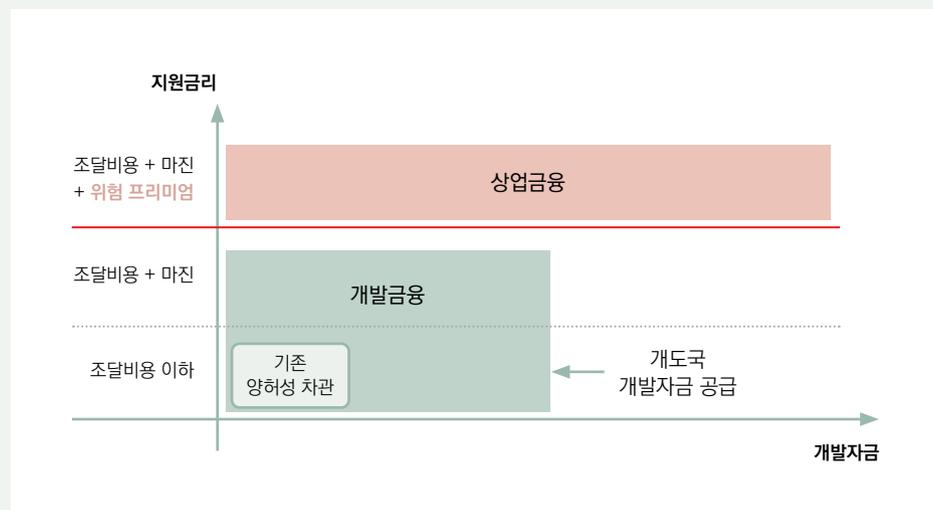
최근 국제사회는 공공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간 금융수단(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도국 민간부문에 공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법(대출·보증·지분투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DAC의 민간자원 동원액은 2018년 250억달러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총금액은 약 615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민간재원의 비중은 2.9%에 불과해 아직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효과적인 연계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시장의 비효율성과 투자위험 때문에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혼합금융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원수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성과는 미흡하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관련 기관들의 제한적 자금조달과 리스크 회피 경향 등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적 재원에 의존한 ODA 지원에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금융 측면에서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DFI)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 간 기존의 복잡한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주요 선진공여국처럼 개발협력, 개발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개발금융 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금융수단과 관련해 보증, 지분투자, 대출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해외 개발금융기구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개발금융 경험과 실적을 쌓고, 초기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Green Transition)을 위해서는 ODA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동원해야 한다.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한국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개발금융 확대가 시급하다. 우선 고양허성 차관 중심의 개발협력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크므로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민간금융수단(PSI)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개발재원의 원천과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방식을 구분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양허성 차관을 적극 운용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장재원을 활용해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재정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림 1 개발금융 운용 기준 및 지원방식 다양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개발금융의 운용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발금융은 개도국 개발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원조달 측면에서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시장차입 등 대외협력 기관의 자체 자원조달을 함께 활용해 자원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지원방식 측면에서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과 수익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성 차관, 보증 지원, 지분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을 포함한다. 즉 시장성 차관은 수익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해 자원조달에 소요된 비용 이상의 금리로 지원하는 차관으로서 양허성 차관과 상업 차관의 중간 성격을 갖는다.

정책적 목적 하에 개도국 사업의 위험을 정부 지원으로 커버해 상업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 경우 개도국 개발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 높은 리스크로 참여를 기피했던 민간자본을 공공재원 투입을 통해 사업에 참여시켜 개발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개발금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금융은 개도국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원조 자금과 민간 상업금융의 중간 공백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개발금융으로 시장에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에 직접 지원을 확대해 공적지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통해 기존의 대출 중심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보증 및 지분투자를 확대해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도국 내 민관협력사업(PPP)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한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등을 활용해 기후변화, 미소금융 등 개발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부문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선도하기 위해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양허성 차관을 적극 운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양허성 차관 혁신 및 정부재원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글로벌
협력패러다임의
변화와 ODA
거버넌스 개편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정책 공조와 협력기반 확충이 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및 글로벌 보건안보와 같이 일국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당면 도전과제로 제기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경로가 다양해지고 앞

3) 기획재정부(2024.2.), EDCF 기금운용위원회 안전자료, 5쪽 참조.

“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ODA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ODA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

으로는 단순한 자금지원 같은 ODA 공여만으로는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ODA 예산이 연간 6조원대로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ODA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시점이다. 이미 주요 국내부처의 예산규모를 넘어섰고,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권화된 원조체제에서 통합적인 추진기능(Control Tower)이 취약하고, 유·무상 원조 분절화로 인해 부처 간 협업이 어려워 사업 간 연계성 및 원조 효과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 및 시행 기관별로 분절화된 ODA 사업 수행체제는 기관별로 수행하기 용이한 다수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수원국의 신뢰와 협력 관계도 취약해 국제적 리더십과 파트너십 제고에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ODA 추진체계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협력 사업 분야가 전문화·다양화되면서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원조체제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양허성 차관 비중이 높아 한국과 유사한 독일은 원조를 담당하는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어 분절화 문제가 낮은 수준이고, 프랑스의 경우 정책기관이 분절화되어 있으나 집행기관은 통합하고 의회에서 통합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무성이 정책을 수립하고 JICA로 집행기관을 통합하여 분절화 문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ODA 정책부서를 통합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 기능을 제고하고, 정책적 일관성과 통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제개발협력처(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개발협력처를 통해 기획, 정책,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도 조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예산 및 인사상의 통합을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조정이 가능하고, 관련부처와 실행기관의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처의 ODA 담당 인력을 개발협력처 인력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확대되는 개발금융 기능도 포함해서 유·무상 ODA 집행기관을 ‘국제개발협력공사(가칭)’로 통합해 집행을 총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도 검토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국조실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로 통합집행기관을 둘 것인가의 문제도 ODA 주관기관과 실행기관의 다양한 의견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정책 사안으로서 단계적 접근을 통해 ODA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Work & Report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주요 통계 소개
경제성장률

NABO 발간보고서 소개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NABO NEWS



경제성장률

글. 임제웅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값이다. 반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값으로,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즉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차감한 값을 더해 구한다.

$$\text{국민총소득(GNI)} = \text{국내총생산(GDP)} + \text{국외순수취요소소득}$$

그림 1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및 명목 국민총소득 (단위: 조원, 만원)



자료 NABOSTATS - 경제통계 - 국민계정 -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2015년 기준)



NABOSTATS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2015년 기준)’ 항목에는 생산액을 당해연도 시장가격으로 나타낸 명목가격에 따른 명목(Nominal) 국내총생산 및 명목 국민총소득 통계가 제공된다.

경제성장률

NABOSTATS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2015년 기준)’ 항목은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통계를 제공한다. 실질(Real) 국내총생산(GDP)은 가격변동을 제거하고 수량 변동만 반영해 계산한 값으로,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 등 실질적인 생산활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사용된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물가지수로는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개념이 사용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백분율로 정의된다.”

$$\text{GDP 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NABOSTATS 통계는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수량에 2015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 계산한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른 연도별 경제성장률을 제공하고 있다. 즉, 2015년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과 유사한 지표로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GDI)이 있다. 국내총소득(GDI)은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질

1)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의 합과 같음



무역손익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실질 무역손익을 더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을 구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하면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이러한 조정은 실질변수에만 적용되므로 명목 국내총소득과 명목 국내총생산은 값이 같다.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시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전망 시리즈」를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IMF, OECD 등 주요 기관이 제시하는 2024년 한국 경제전망 수치는 NABOSTATS ‘경제전망’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주요 기관의 2024년 한국 경제전망 (단위: %)

기관	2024년 한국 경제전망	비고(전망 시점)
국회예산정책처	2.2	2024. 3. 29.
기획재정부	2.2	2024. 1. 4.
한국은행	2.1	2024. 2. 22.
KDI	2.2	2024. 2. 14.
IMF	2.3	2024. 1. 31.
OECD	2.2	2024. 2. 5.
ADB(아시아개발은행)	2.2	2023.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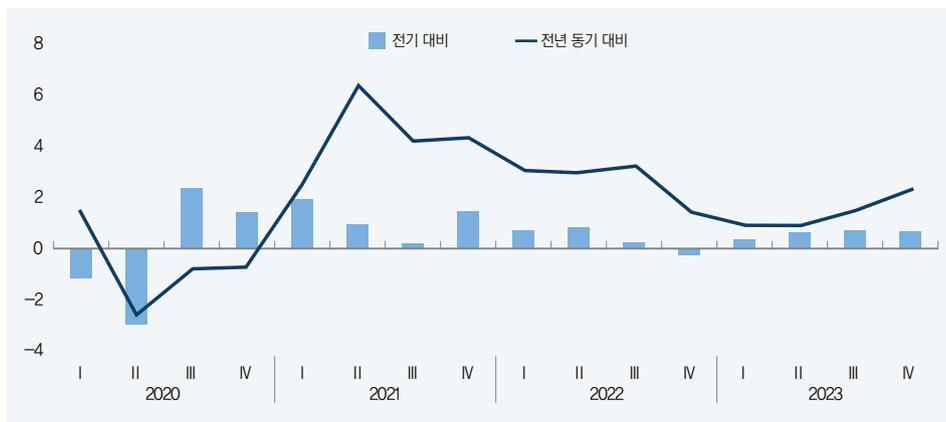
자료 NABOSTATS - 경제통계 - 국민계정 - 경제전망

국내 경제는 2023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며 성장세가 확대됐다. 실질GDP 성장률은 하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해 상반기의 0.9%를 크게 앞섰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로 2022년의 2.6%에 비해 상당 폭 낮아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2024. 3.)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돼 대외 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2024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그림 2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성장률은 2024년 5.0%로 예상했다. 2024년에는 실질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모두 2023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다(실질GDP 1.4%→2.2%, GDP 디플레이터 2.1%→2.8%).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교역조건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빠른 개선 추이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국제가격 상승, 국제 원자재가격 하향 안정 등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개선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표 2 명목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	하반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3.9	3.4	6.1	4.1	5.0
실질국내총생산	2.6	1.4	2.4	2.1	2.2
GDP디플레이터	1.3	2.1	3.6	2.0	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경제전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산정정책처의 보고서와 통계를 함께 이용하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BO 발간보고서 소개



NABO 보고서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국회예산정책처 20년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2월 28일
2024 경제전망 I-IV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3월 29일

NABO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경제동향 제41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2월 23일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2024년 Vol.1 제26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3월 29일
NABO 경제동향 제42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4월 26일
NABO 재정동향 & 이슈(2024년 Vol.1 제24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4월 26일

※ 발간된 보고서는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와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BO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년

기획관리관 정책총괄담당관실



200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으로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지난 20년 동안의 국회예산정책처 발전과 성과를 기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구성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기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20년」을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년」 제작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기관 전체의 역사를 서술한 통사 및 업무별 발전상을 담은 부문사와 함께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담은 특집과 기타 부록으로 구성됐다.

통사는 서술 대상 기간인 20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및 기틀을 형성하는 과정을 서술했고, 후반부에서는 증가하는 국가재정 분석 수요에 대응하면서 최고의 재정정책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노력을 서술했다.

업무별 부문사에서는 실·국별 업무의 주요한 변화와 성과를 다루었으며 해당 업무에 몸담았던 전·현직자의 회고를 담아 업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소감과 전망 등을 포함했다. 끝부분에는 각 실·국별 부서장이 생각하는 업무발전방안으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마주한 재정·정책 여건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고민을 제시했다.

특집 부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2023년도에 추진한 각종 행사 소식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주년 설립기념식, 제1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신입직원 간담회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 전 직원이 설립 20주년에 대한 감상을 수기로 작성한 전 직원 한마디를 수록했다. 한편 부록은 국회예산정책처 20년 사진모음집, 주요 업무 실적 및 분석 보고서와 역대 처장 명단, 조직도 등으로 구성했다.

2024 경제전망 I-IV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본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이후 변화된 국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해 총 4권으로 구성된 「2024 경제전망 시리즈」로 발간됐다.

제 I 권에서는 국내 경제를 소비와 투자, 수출입 등 지출 측면에서 분석·전망했다. 2024년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이다. 예상보다 둔화된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민간소비, 정부소비, 민간투자 등 내수 부문에서 이전 전망보다 하향 조정했으나, 순수출의 성장세에 더욱 무게를 두어 우리 경제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2.0%)보다 다소 상향 조정했다.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보다 완만하게 물가안정 목표 수준(2.0%)에 근접할 전망이다.

제 II 권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을 생산 측면에서 분석·전망했다. 2024년 총부가가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이다. 산업 부문별로는 제조업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3.7%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가 제약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 작년보다 낮은 1.8%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제 III 권에서는 국민총소득을 비롯해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 및 수입세 등의 소득변수와 고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법인소득 증대가 예상되어 영업잉여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반면 피용자보수 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됐다. 순생산 및 수입세는 2023년 이례적인 하락의 기저효과로 2024년에는 지난 전망 대비 큰 폭의 반등이 예상된다. 반면 국내총소득은 국외 순수취소득의 감소로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제 IV 권에서는 성장의 측면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및 금융 여건을 분석·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잠재성장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24년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지난해 10월 전망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됐으나,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정체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기타 요소의 성장기여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NABO 정기간행물

NABO 경제 동향

(제41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 동향

2023년 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판매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0.8% 감소했지만, 2024년 1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8.0%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하였다. 2023년 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고용은 2024년 1월 취업자 수가 2,774.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0만명 증가해 2년 11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경제 현안: 부동산 PF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2023년 9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액은 134조원으로 2017년 대비 103% 증가한 가운데 최근 건설비용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도 2020년 말 7.9조원에서 2023년 2분기에 23.3조원으로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차이로 부동산 PF 대출이 통합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PF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초기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분류기준 및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6호)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I. 재정추계 & 세제 동향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소득세제·법인세제] 2023년 주요국 소득세제의 경우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 국가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상향했다. 한편, 법인세제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율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차질,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시행했다.

그 밖에 주요 재정추계 & 세제 동향으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해외 제도 운영 현황’,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등을 수록했다.

II.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및 분석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석] 2024년에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5년간(2025~2029년)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총 2조 2,372억원(연평균 4,4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그 밖에 주요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및 분석으로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등을 소개하고 관련 시사점 등을 수록했다.

NABO 경제 동향 (제42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 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내외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부진이 지속되어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0%, 전월 대비 1.3%로 모두 증가했다. 3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는 하락했고, 강달러화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경제 현안: 우리나라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OECD 평균(=100)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75.8수준으로서 미국(148.2), 일본(83.1), 독일(87.8), 영국(86.2), 이탈리아(94.3), 캐나다(90.6)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중 특히 유통·운수·음식·숙박(65.2), 정보통신(64.5) 등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생산 관련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 대비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문 노동생산성 향상을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저생산성 서비스업 부분으로 유입되는 고용인력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교육투자 확대 필요하다.

NABO 재정동향 & 이슈(제24호)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I. 주요 재정지표

2024년 2월까지의 총수입 진도율은 15.9%, 총지출 진도율은 19.4%이다. 2024년 2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29.9조원 적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5.3조원 증가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2.5조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59.1조원 증가했다.

II. 주요 재정동향 & 이슈

주요 재정동향&이슈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 ‘2023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발표’, ‘글로벌 녹색산업 육성방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발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발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4대 혁신방안 발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확정’, ‘2024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등을 제시했다.

III. 해외재정동향

해외재정동향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년 중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미국, 2024회계연도 예산 확정’의 주제를 선정해 재정 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제13권 제1호

발간일: 2024년 3월 20일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NABO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며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nabo.jams.or.kr)을 통해 논문을 상시 공모하고 있다.

※ 본문은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1호에 수록된 논문초록으로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인구 고령화와 최적 조세

저자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2기간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해 인구 고령화가 최적 조세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세수가 정부의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경우와 정액 이전지출(Lump-Sum Transfer)을 통해 개인들에게 반환되는 경우를 구분하고, 각 경우에 출생률의 변화와 사망률의 변화가 최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살펴본다. 출생률의 하락과 사망률의 하락은 모두 인구 고령화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요인이 최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각 요인이 최적 조세에 미치는 영향도 세수가 정부의 소비지출로 사용되는 경우와 정액 이전지출을 통해 개인들에게 반환되는 경우에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최적 조세의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연령구조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출생률과 사망률의 추이를 각각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용한 재정 수단의 종류 및 정부 부문의 역할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도 최적 조세 구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산안 자동부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

저자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예산안 자동부제도는 예산과정의 불확실성과 기회주의로 인한 정치적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과 관련된 비규범 상태를 최소화하려는 제도 개선으로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됐다. 동 제도는 예산안의 처리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소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어 국회 내 회의체(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간 역할 비중의 변화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 간 역학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동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제약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협상력과 영향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국회의 예산 증액률, 감액률, 수정률 등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통계 상으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이 이전보다 제약되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도입의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예산의 증액률, 감액률, 수정률 등 금액 기준 지표의 변화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반면, 사업의 수와 관련된 증액 사업의 비율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의 영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본회의의 역할 비중이 늘어나면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정책적 기능보다는 분배 중심의 정치적 기능이 강화됐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비용은 감소한 대신 협상비용과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근대 예산의 출발: 재정헌법과 최초의 예산

저자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명예교수

본 연구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의 제헌헌법과 재정조항에 대한 논의의 과정, 그리고 헌법 제정 직후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승인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근대적 재정 운용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헌법 재정조항의 규범적 목표와 실무적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근대 재정 출발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로부터 제도적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한국 재정헌법의 특징은 ‘의회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 금지’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원칙이다. 이들 두 원칙의 공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징인데, 본 연구는 이들이 채택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 국회는 1949년 1월부터 4개월간 헌법의 예산 규정을 준수하고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추구하는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사실이 근대적

재정의 핵심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정 운용이 미국 등 서구에서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표어로 표현되지만, 한국에서는 “대표 없이 예산 없다”가 돼야 할 것이다. 세 개의 예산안이 한꺼번에 국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 예산안이 제출됐던 1949년 3월 31일은 한국이 근대적 재정운용의 출발선에 선 날로 길이 길이 기억돼야 할 것이다.

재정집행 책무성에 대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 비교

제1저자

한태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는 재정집행 책무성에 미치는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 한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 책무성 지수를 제시해 2016~2021년 사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과 2단계 일반화적률법(Two-step System GMM)을 사용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자체재원이 재정집행책무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모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모형에 상관없이 이전재원의 증가는 예산집행 책무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통계모형에서도 이전재원은 자체재원에 비해 재정집행 책무성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재원은 자체재원에 비해 주인-대리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전재원은 행동의 용이성이 높아 기회주의적 행태가 유발되기 쉬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재정집행 책무성 지수를 제안해 재정집행 책무성에 대한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영향 차이를 주인-대리인 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전재원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의 적시적 공개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집행 비교지표가 재정성과지표로 반영돼야 함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NABO NEWS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 개최

NABO는 지난 4월 24일(수)~26일(금) 3일에 걸쳐 OECD와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5일(목) 개회식은 마크 해들리(Mark Hadley)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의 기조연설과 조의섭 처장이 주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오후 세션에서는 ① 예산편성과 심의단계에서의 의회와 의회예산기구의 역할, ② 재정역량 확립을 위한 의회예산기구 역량 강화 방안, ③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 제도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26일(금)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재 워크숍 및 참가국 간 일곱 차례에 걸친 양자회담을 실시했다.

※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신뢰성 높은 공공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와 공동으로 주도하여 설립한 기구



Vol. **74**
2024 두 번째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행사

더 많은 소식은 www.nab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NABO는 지난 3월 19일(화) 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정 분야 업무 고도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조의섭 처장, 이양성 기획관리관, 박주연 기획예산담당관,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과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김복만 제1부의장, 홍성현 제2부의장, 이정구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예·결산분석 및 비용추계 등 재정분야 업무 고도화,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한국재정학회 공동주관 세미나 개최

NABO는 지난 3월 22일(금)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주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주관 세미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경험과 한국재정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세미나에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국회예산정책처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활용, 예상 국민연금소득이 자녀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학자금채무 탕감의 효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Fiscal Story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

지방재정 이야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개선 방향

재정·경제학자 이야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

글. 양재찬

가천대학교 겸임교수·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미국 민간 탐사선 달 착륙 성공... 달 오른 '우주경제'

미국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지난 2월 22일 달 착륙에 성공했다. 오디세우스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선으로선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했다.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이란 이민자 출신 기업인이 세운 우주탐사 기업이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달 착륙은 미국·러시아·중국·인도·일본 등 5개국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성공시켰다.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성공으로 이제 기업이 우주탐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다. 민간 기업이 우주 공간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영역으로 개척하는 우주경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2019년)과 일본(2022년) 기업이 각각 민간 탐사선의 착륙을 시도했지만, 모두 달 표면에 충돌하면서 실패했다. 미국의 다른 기업 아스트로보틱 테크놀로지도 올해 1월 연료가 누출되며 추락했다.

오디세우스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유인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지원하는 '민간 달 탐사체 수송 서비스(CLPS)'의 하나로 선정된 우주선이다. 공중전화 부스 크기인 우주선에 NASA의 관측·탐사 장비 6개를 실어 보냈다. 오디세우스는 달 착륙 7일 만인 2월 말 전원이 꺼진 채 영구 동면에 들어갔다. 개발업체는 "달 착륙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미래의 달 경제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주는 군사안보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기술을 개발해 온 분야였다. 정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해온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였다. 2015년 세계적인 전기차 메이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SpaceX)가 회

수 가능한 재활용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시대가 열렸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 400~500 km 저궤도 공간에 군집 위성을 수천 기 띄워 지구 전역을 돌면서 위성 인터넷과 통신·위치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스타링크)를 시작했다. 그 효용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됐다.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등 우주 기술이 우주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 패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 산업이 우주 만나면 더 많은 가치·일자리 창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NASA가 물체를 우주 공간에 보내려면 kg당 4만달러가 들었다. 이와 달리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은 951달러면 가능하다.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으로 로켓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자 우주는 안보·군사적 공간에서 경제·산업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 우주산업을 이끄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주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도래할 5차 산업혁명은 우주 기술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에 이어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을 창업했다. 세계적 부호들이 우주산업을 관심을 갖는 것은 우주경제의 가치 사슬(Value Chain)과 큰 파급효과 때문이다.

신생기업들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면서 기업 간 인수 합병(M&A)과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이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엔젤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우주 스타트업 벤처들이 생겨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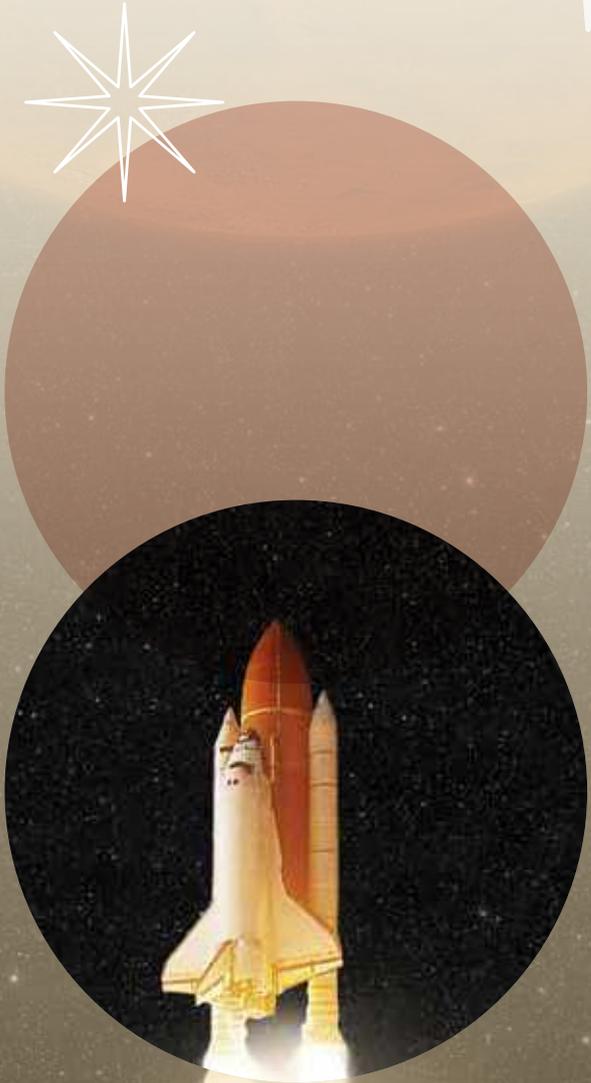
우주산업은 크게 위성 제조-발사-위성 운영-위성 서비스 영역으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주경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우주에 대한 연구개발과 우주 인프라(지상기지, 발사체, 인공위성) 제조 및 사용, 우주 응용 생산물(항법 장비, 위성전화, 기상 서비스 등)과 창출되는 과학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관련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모든 산업을 포함한다.”

국가 주도의 우주산업(올드 스페이스)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착이나 군사용 우주 활동, 우주과학 등에 한정됐다.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 우주산업(뉴 스페이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과 기존 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업이 우주를 만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대표적 분야로 해양산업이 꼽힌다. 우주의 위성항법 시스템과 해양산업이 융합하면 해양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된다.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정밀 측정을 통해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선박 운항은 물론 무인 또는 유인 자율운항이 가능해진다. 해상 물류도 원격 관리를 통해 더욱 지능화된다.

멀리 떨어진 육지에서 양식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게다가 기후를 예측해 위험을 피하고 최적 항로를 파악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해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비교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
목표	국가적 목표 (군사, 안보, 경제, 과학지식, 국가위상 제고)	상업적 목표 (시장 개척)
개발 기간	장기	단기
개발 주체	국가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개발 비용	고비용	저비용
주요 자금 출처	정부(공공 자본)	민간(상업 자본)
관리방식	정부 주도	자율 경쟁
특징	보수적, 위험회피, 신뢰성	혁신성, 리스크 테이킹, 고위험
대표 사례	아폴로 프로젝트, 우주왕복선	스페이스X, 로켓랩, 원웹

자료 안형준 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 대응」, 2019

계를 뛰어넘게 해줄 자원의 보고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의 경우 달에 지구의 10배 이상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달 표면에는 최소 100만톤의 헬륨-3가 침전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가 1만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매장량이다. 한국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저궤도 경제권을 넘어 달까지 이어지면 우리나라 첨단산업은 달의 자원을 활용해 공급망 제약 없이 성장할 수 있다.

우주는 꿈만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산업이다. AI 기술 개발로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주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뿐만 아니라 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우주는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공간이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선 화학 반응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장애가 많았던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제약사와 의료기업이 우주정거장까지 가게 되면 바이오-헬스 케어 산업은 더욱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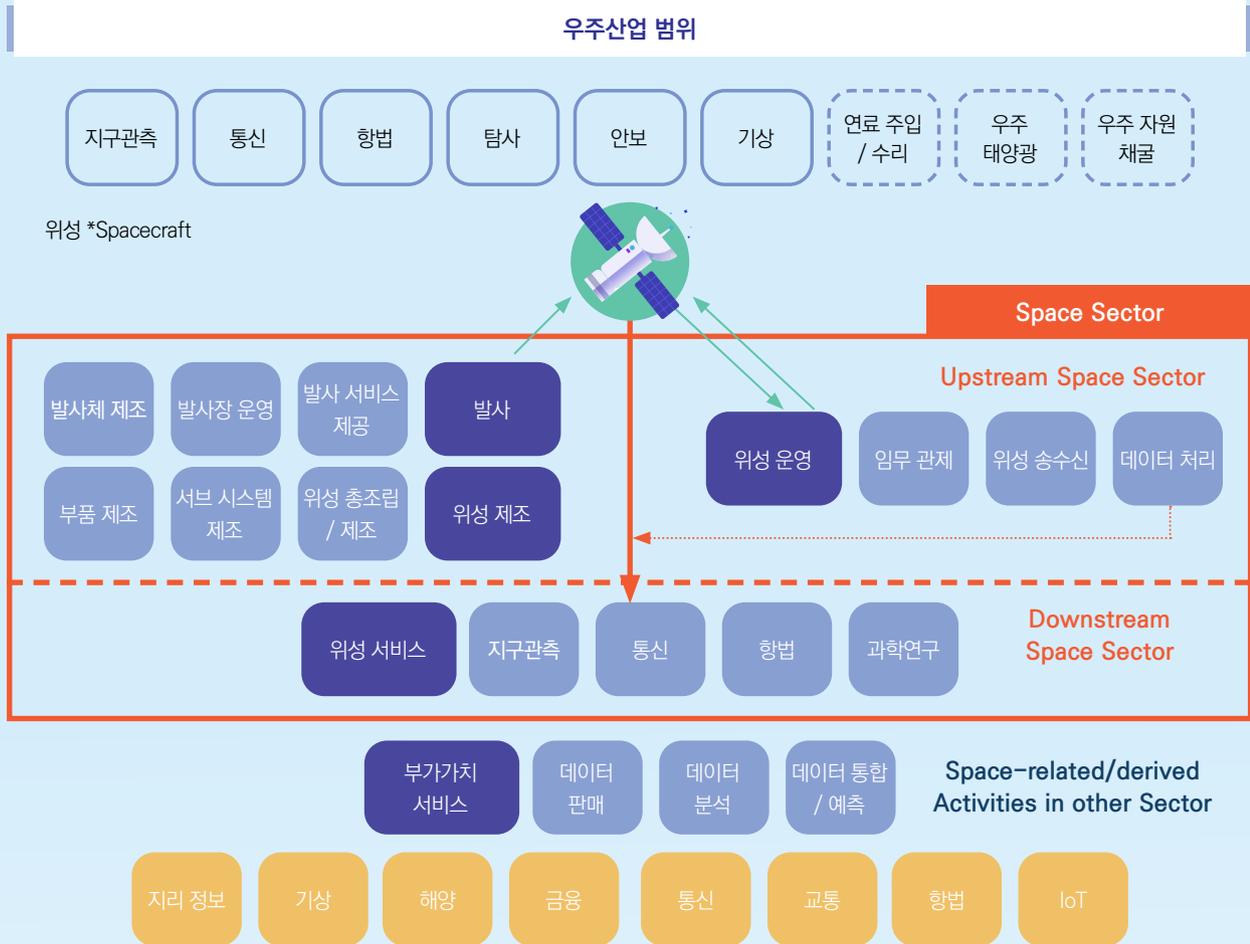
자동차의 안전한 자율주행과 항공 기술에는 초정밀 위성 합법 시스템이 필수다. 자율주행 중 생산되는 각종 운행 데이터는 그 자체로 부가가치 덩어리인데, 인

공위성은 세계 각지에서 운행되는 자사 자동차의 운행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더해 교통량 등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의 기술로 우리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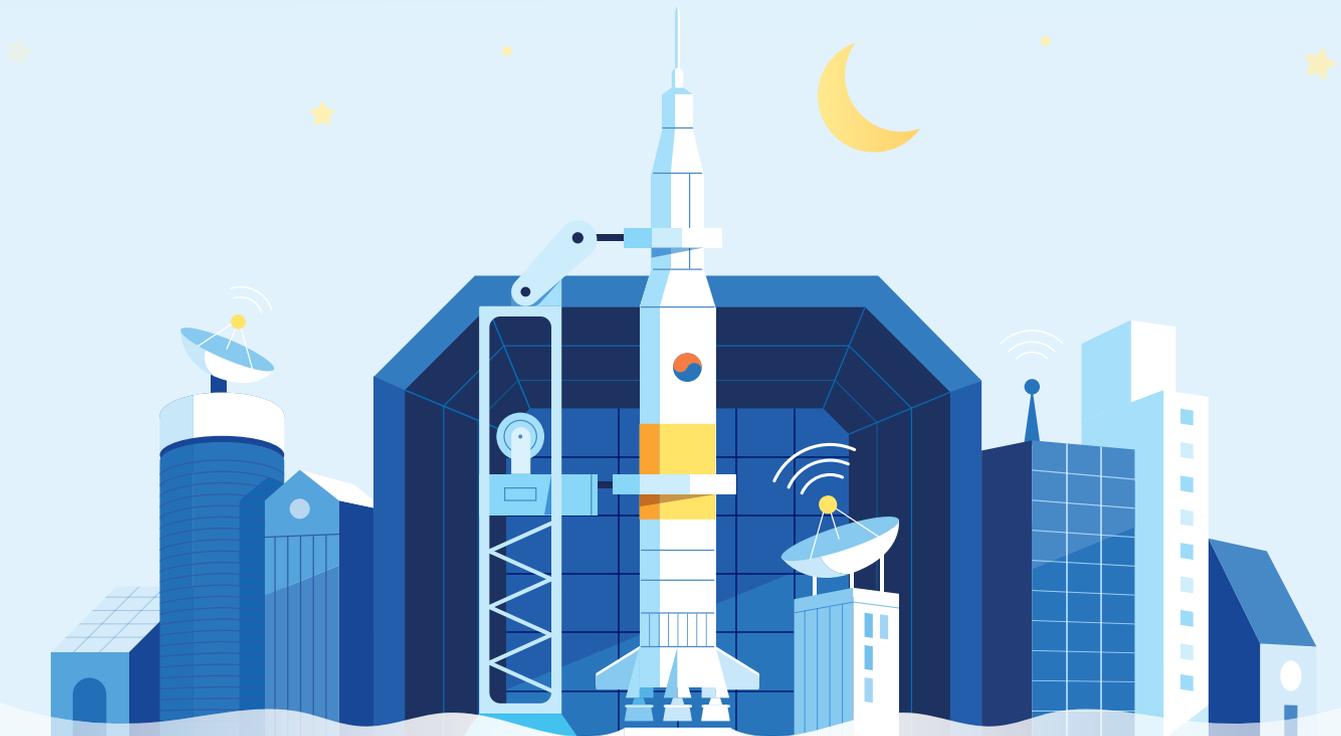
통신이 우주를 만나면 사막이나 깊은 산골 등 인터넷 사각지대에서도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게임업계도 더욱 커진다. 6세대(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낮은 사양의 기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게임 보급도 더 활성화할 것이다.

이밖에도 인공위성이 매일 보내오는 방대한 양의 영상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내려받은 뒤 이를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하면 많은 산업 분야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전 세계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분석해 물동량을 예측할 수 있다. 대형마트 주차장과 공항 비행기를 분석해 쇼핑물과 항공사 매출을 추정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작물 작황과 개별 작물의 성장 상태를 파악해 수확량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느 구역부터 수확해 판매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





자료 안형준 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현황 진단과 정책 대응」, 2019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주요 내용

6대 정책 방향

- ① 달·화성 탐사
- ② 우주기술 강국 도약
- ③ 우주산업 육성
- ④ 우주인재 양성
- ⑤ 우주안보 실현
- ⑥ 국제공조 주도



목표 일정

2022년~5년 내

달 탐사용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시작

2045년 광복 100주년

화성 착륙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2022

우주항공청 개청... 민관 협력해
'뉴 스페이스' 시대 따라잡아야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지난 10여년 사이 급성장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할 전망이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20년 3,850억달러(480조원)에서 2030년 5,900억달러(735조원), 2040년에는 1조 1,000억달러(137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10년 간격으로 거의 2배씩 커진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예측한 2040년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2조 7,000억달러(3,363조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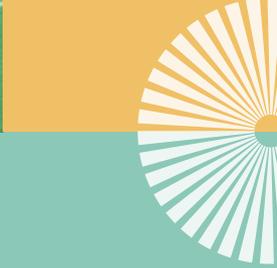
막 열리기 시작한 우주산업은 우리나라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미래산업이다. 한국은 미국의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자력으로 1톤급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에 올랐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국산 우주 기술도 인정받았

다.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고도화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7년까지 3차례 추가 발사를 진행하면서 정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로부터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등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을 전수받는다. 이 과정에 국내 스타트업체들도 참여한다.

정부는 2022년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23년 달 착륙 및 자원 채굴, 2045년(광복 100주년) 화성 무인 탐사기 착륙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였던 세계 우주산업 시장점유율을 2045년 10%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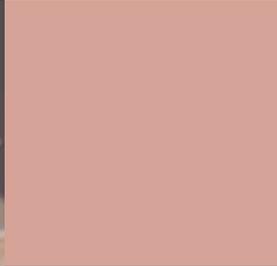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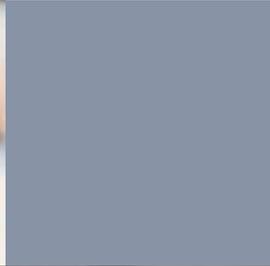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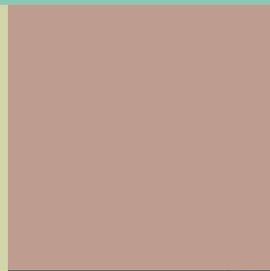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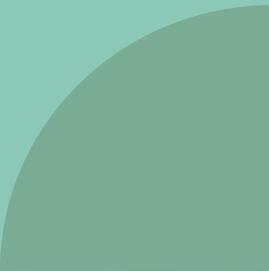
우주산업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 차세대 발사체 등 기술 개발에 큰 비용이 들어가고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주경제는 이미 세계적 흐름이고,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블루오션이다. 여야 간 정쟁 등 진통 끝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 경남 사천에서 공식 출범한다. 우주항공청과 민간 기업들이 지혜와 힘을 합쳐 '뉴 스페이스' 시대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개선 방향

글. 한재명

한신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들어가며

우리나라 재정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은 국가(중앙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며, 지방재정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가리킨다. 지방재정은 다시금 일반자치단체의 재정과 지방교육자치단체(시·도 교육청)의 재정으로 나뉜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하며, 교육비특별회계의 명칭으로 일반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즉 시·도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가와 일반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전수입 중에서도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크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4.8%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50여 년 동안 내국세에 연동해 그 규모가 계속 커져 왔다.¹ 교육환경이 부실하고 학령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던 과거에는 초·중등 교육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내국세 연동 방식에 의해 규모가 커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를 물질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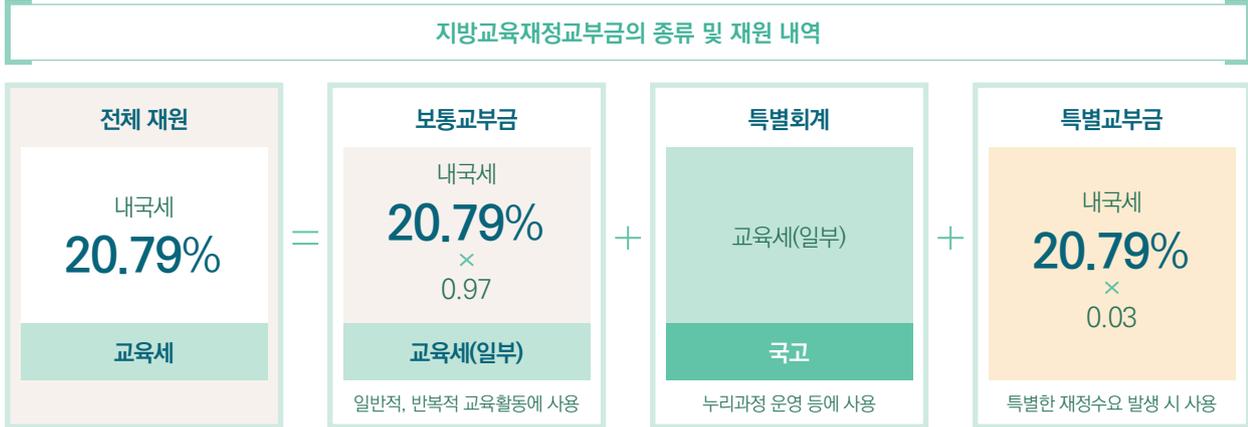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재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실질소득과 물가에 연동하되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까지 포괄해 재원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 산정 방식과 재원 활용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쟁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대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

¹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산정 방식은 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처음 도입돼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71. 12. 28.)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시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에 따른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 및 중학교로의 의무교육 확대 등에 대응해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존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를 통합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내국세에 연동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산정 방식이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이 97%에서 96.2%로 하향되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3%에서 3.8%로 상향 운영됨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

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가-지방교육 간 재정조정제도의 일종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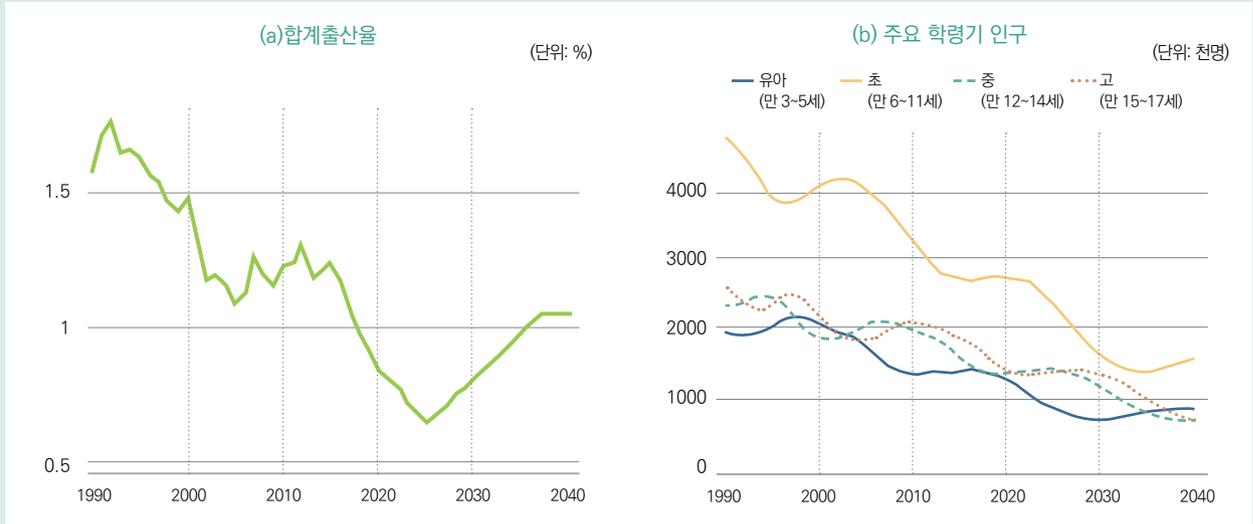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정률분(20.79%)과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로 편입되는 일부를 제외한 재원의 대부분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형태로 운영된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정률분(20.79%)의 97%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정률분(20.79%)의 나머지 3%를 재원으로 한다.³ 보통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를 핵심 재원으로 해 예산을 편성한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유·초·중등교육 부문의 국가시책사업수요(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를 위해 사용된다.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되지 않는 교육세 절반 부분은 정부 일반회계 추가전입금과 함께 누리과정⁴ 지원을 위한 유특회계의 재원을 이룬다. 나머지 교육세 일부는 고등교육 재정지

원 확대를 위한 고특회계의 재원으로 편입된다.⁵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은 신장성이 큰 내국세에 연동해 꾸준히 증가해왔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주요 수혜자 계층인 학령인구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9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급감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학령기 인구도 시차를 두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반 1.7명 대에서 2000년대 중반 1.2명 대까지 떨어졌고, 2015년부터 다시금 감소하기 시작해 2022년 0.778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영향으로 유·초·중·고 연령대의 인구수 역시 시차를 두고 꾸준히 줄어들었다. 2000년대에 걸쳐 유아와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23.12.31.)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이 97%에서 96.2%로 하향되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3%에서 3.8%로 상향 조정됐다. 이 상황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기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해 활용된다.
 4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말한다. 이 누리과정 운영 경비는 2016년까지 보통교부금 일부로 지원됐으나 2017년부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유특회계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되어 2025년 말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2023년 고특회계 세입예산의 구성을 보면 기존 사업 이관분 8.02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지원분 0.2조원을 제외하면 교육세 전입분은 1.52조원에 불과하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3.9. 232쪽)

합계출산율 및 주요 학령기 인구 추이: 1990~2040년



주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인구변동 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 가정 기준 추계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



연도별 학령기 인구 추이: 2000~2040년

(단위: 천명, %)

시점	총인구	소계(만 3~17세)	유아(만 3~5세)	초(만 6~11세)	중(만 12~14세)	고(만 15~17세)	
2000	47,008 (100.0)	10,185 (21.7)	2,077 (4.4)	4,073 (8.7)	1,869 (4.0)	2,166 (4.6)	
2010	49,554 (100.0)	8,682 (17.5)	1,332 (2.7)	3,280 (6.6)	1,985 (4.0)	2,084 (4.2)	
2020	51,836 (100.0)	6,735 (13.0)	1,257 (2.4)	2,724 (5.3)	1,364 (2.6)	1,390 (2.7)	
2030	51,306 (100.0)	4,747 (9.3)	660 (1.3)	1,607 (3.1)	1,154 (2.3)	1,326 (2.6)	
2040	50,059 (100.0)	3,759 (7.5)	829 (1.7)	1,565 (3.1)	679 (1.4)	686 (1.4)	
연평균 증가율	2000~2010	0.53	-1.58	-4.34	-2.14	0.60	-0.38
	2010~2020	0.45	-2.51	-0.58	-1.84	-3.69	-3.97
	2020~2030	-0.10	-3.44	-6.25	-5.14	-1.65	-0.47
	2030~2040	-0.25	-2.31	2.31	-0.26	-5.17	-6.37

주 2022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23년 이후는 인구변동 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 가정 기준 추계치임. 괄호 ()안은 각 연도 총인구 대비 연령 범주별 인구 비율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

학교급별 학생, 학교 및 학급 수 연평균 증가율(2011~2022년) 현황

(단위: 천명, 개교, 개, 명/학급,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1	2022	연평균 증가율 (11~22)	2011	2022	연평균 증가율 (11~22)	2011	2022	연평균 증가율 (11~22)	2011	2022	연평균 증가율 (11~22)
학생 수	565	553	-0.20	3,122	2,656	-1.46	1,905	1,345	-3.11	1,929	1,252	-3.85
학교 수	8,421	8,527	0.11	5,865	6,163	0.45	3,144	3,252	0.31	2,263	2,355	0.36
학급 수	26,975	33,156	1.89	122,479	126,088	0.26	57,645	53,802	-0.63	58,196	55,313	-0.46
학급당 학생 수	20.9	16.7		25.5	21.1		33.0	25.0		33.1	22.6	

주 각 연도 4월 1일 기준임. 연평균 증가율은 2011~202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010년대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했다(1차 감소기). 2020년대에 들어 유아와 초등학생 수가 다시금 급감하면서 2030년대에는 순차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2차 감소기).

1차 학생 수 감소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011~2022년 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는 각각 연평균 -3.11%, -3.85%의 속도로 급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학급 수는 소폭 감소했고(각각 연평균

-0.63%, -0.46%) 학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각각 연평균 0.31%, 0.36%).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20.9명→16.7명)에서 고등학교(33.1명→22.6명)까지 크게 감소해 정부(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없이도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2021년 기준으로 학교급별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는 약간 많고(각각 16.1명, 14.6명), 중학교는 엇비슷하며

2020년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PPP))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한국	13,278 (124.6)	17,038 (142.7)	12,225 (67.5)	14,113 (111.6)
OECD 평균	10,658 (100.0)	11,942 (100.0)	18,105 (100.0)	12,647 (100.0)

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2020년) 837.67원/\$. 괄호 안은 OECD 평균 대비 비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 2023.9.12.



(각각 13.3명, 13.2명), 고등학교는 약간 적은 수준을 나타낸다(각각 10.7명, 13.3명).⁶ 2020년부터 유·초·중학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초등학교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과 엇비슷해지거나 그것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이 OECD 평균보다 24.6~42.7% 더 많지만, 고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32.5% 더 적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의 신장성 높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초·중등교육에만 집중 투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공공 투자가 미진한 편으로 교육 분야 내 공공지출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요컨대 2000년대 이후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과잉 지출(투자)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기반

이 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교육 분야 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칸막이에 기인한 불균형이자 비효율적 자원(예산) 배분의 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⁷



⁶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 및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수석교사, 보직교사, 실기교사 등)를 대상으로 산출한다(관리직 교원,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한국교육개발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 2023. 9. 12. 참조

⁷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DI FOCUS』, 제110호, 2021. 12. 29.



개선 방향

2000년대 들어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성장성 높은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두 상반된 추세가 결합해 국가(교육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없이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의 배면에는 교육 분야 내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공공지출 수준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재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까지 포괄해 재원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되 유·초·중등교육의 특수성도 같이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은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에 의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던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하되 유·초·중등교육의 특수성도 같이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충분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목표와 연계한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충분성이다. 유·초·중등

교육 재정의 총량은 특정 시점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거나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가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 교육목표는 양적·질적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규모, 정부 총예산 대비 유·초·중등교육 재정 비중, 학생 1인당 유·초·중등교육 재정 지출액 등을 OECD 평균 또는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가속화, 직업 세계의 급변 등 교육 및 진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또는 맞춤형 교육, 진로 기반 고교학점제 운영 등 기존과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의 제공 등에 초점을 둔 미래 지향적 성격의 목표를 설정·추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적·질적 목표는 교육 및 재정 전문가, 학교 선생님, 학부모, 교육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숙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가 제도 변화 시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량 규모로 설정될 수 있다.

둘째,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이다. 일단 설정된 총량 규모는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에 연동해 증감하되 여기에 학생 수 변화를 반영해 조정한다. 예를 들어 현연도 교부금 총량은 전년도 교부금 규모에 현연도 경상GDP성장률을 적용해 증감하되, 전년도 학령인구 대비 현연도 학령인구의 비율을 적용해 총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김학수, 2021, p.6). 이 같은 방식에 기반한 교부금 총량은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 따른 총량 규모를 밀돌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식에 의해 절약된 재원⁸은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 또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새로운 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 및 재원 활용 방식이 교육 분야 내 재정간막이를

일부 제거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대학교육 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를 늘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처럼 다른 예산과 함께 교육예산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고려해 매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예산 배분 또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조정의 여지가 적고, 일반지방재정과 분리·운영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심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에서와 같이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일반 예산처럼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심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유·초·중등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양적·질적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해서도 유·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절약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배분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¹⁰

8 김학수(2021)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에 따라 절약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1~2060년 동안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비교해 약 1,046.8조원에 이른다. 또한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총량은 G20 상위 국가 기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60년까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추정된 최소 필요교부금액보다 연평균 12조원 가량 더 크다.

9 김성은·강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나보포커스」, 제47호, 2022. 6. 21.

10 최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로 불리는 광역자치단체 주도 대학재정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RISE체계와 관련해 거버넌스 및 행정조직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 재정확보 및 분배에 관한 논의는 미진한 편이다. RISE의 성공적 시행 및 안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충분한 재정확보 및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측면에서 새로운 총액 산정 방식에 의해 절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을 RISE 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학자로서의 명성과 더불어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회의 의장,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그리고 저술가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주류 경제학자 사이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의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행보가 어떤 접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Joseph Eugene
Stiglitz*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ugene Stiglitz)는 1943년 미국 시카고 남서쪽에 인접한 미시간호 호반의 도시 개리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1906년 US스틸에 의해 생겨난 기업 도시로, 1960년대 이후 미국 철강업이 쇠퇴하면서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지역이었다.

스티글리츠는 고향에서 실업과 빈곤, 인종차별 등을 목격하면서 성장했고, 유년기의 이러한 경험은 사회 및 경제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시켰다. 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공공정책 토론 수업에 적극 참여했던 그는 어린 나이부터 사회제도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스티글리츠가 진학한 애머스트 칼리지는 교양교육 중심의 소규모 대학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긴밀하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소크라테스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 간의 사적 사교모임이 재학생들 사이의 분열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대한 폐지 운동을 추진하는 등 일찌감치 정치 행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물리학을 비롯해 역사와 생물학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한 스티글리츠는 그중에서도 경제학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다. 역사 및 인문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수학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교수님들은 그가 MIT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했고, 스티글리츠는 새로운 배움에 갈증을 느낀 나머지 학위도 받지 않고 MIT에 발을 디뎠다.

당시 MIT에는 사무엘슨이나 솔로와 같은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진보적 학풍을 띄고 있어 스티글



리츠의 성향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보수적 성향을 띄었던 시카고대학과 수리적 모형보다는 철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잠시 수학할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MIT로 돌아왔다. 스티글리츠는 고전학파적 완전 경쟁 시장모델이 간과한 '현실적 요소'를 반영한 모형을 고안하고, 시장이 생각만큼 완벽히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학자적 목표를 두었다.

정보 비대칭에 관한 심층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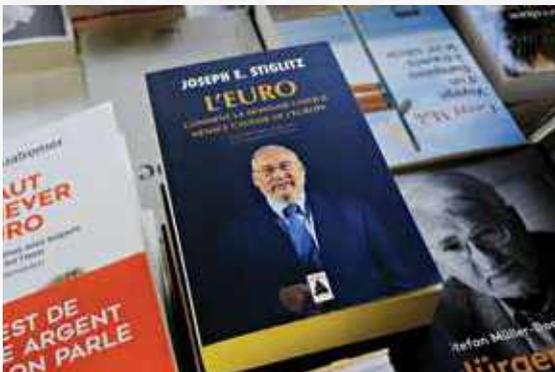
스티글리츠는 스승들처럼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두었지만, 학계에서 주목한 그의 연구는 '정보 비대칭'에 대한 것이었다. 정보 비대칭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되는 재화에 대해 보유한 정보가 서로 다른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MIT에서 함께 공부했던 조지 애커로프(George Akerlof)가 '레몬마켓(불량품만이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분야이다. 정보비대칭은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화가 정상인지 불량품인지 구매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이라고 지칭하는데, 구매자는 제품 품질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낮게 설정하게 된다. 정상품을 보유한 판매자는 너무 낮아진 구매 희망가격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장하고, 낮은 가격에도 판매할 의향이 있는 불량품 보유자만이 시장에 남게 됨에 따라 결국 불량품만 거래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이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샌포드 그로스먼(Sanford Grossman)과의 공동연구에서 그는 가상의 자산 시장을 상정했는데, 이곳에서 주가 수익률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부분과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의 합으로 구성된다. 시장에는 주가 전망에 대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증권사 애널리스트 등)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 그 자체가 거래 가능해지면 정보 비대칭이 사라지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보의 격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유인이 없어진다. 즉, 주식 가격에 정보가 온전히 반영된 효율적 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로스먼-스티글리츠 역설’로 알려져 있다.

스티글리츠는 정보 비대칭이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곳으로 신용(대출)시장을 지목했다. 고전적인 대부자금설에서는 자금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서 시장 이자율이 결정되며 해당 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는 은행이 높은 이자율에도 대출받길 희망하는 차주(借主, Debtor)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하



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은행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때, 수익성을 우선으로 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포기하는 반면 상환할 의도가 적은 위험한 차주만 신용시장에 남게 된다. 중고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역선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게 되는데,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보유 재산, 과거 부채상환 실적 등을 분석해 신용도를 평가하고, 부도 위험을 고려해 차주별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그다음으로 고위험 차주와 거래하지 않기 위해 대출 이자율의 상한을 정하고, 그것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희망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걸러내기(Screening)’라고 부른다. 돈이 부족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 보다 오히려 자금이 넉넉한 사람에게 은행 대출이 더 쉽게 승인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 측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신호 보내기(Signaling)는 정보를 보유한 측에서 자신이 정상품 판매자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을 말한다. 일례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블랙박스 설치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 비대칭은 고전 경제학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으로, 1970년대 경제학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금융이나 노동시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보 비대칭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전파의 분석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수많은 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애커로프와 스티글리츠는 정보 비대칭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인정받아 또 다른 기여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와 함께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효율성 임금 이론의 제시

스티글리츠는 노동시장에서 상시 존재하는 실업에 대해 연구했다. 고전학파에서는 노동시장에서도 수요(고용주 측)와 공급(근로자 측)의 균형에서 임금이 결정되므로 ‘실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근로자는 제각각 자신이 일하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유보임금)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유보임금보다 낮을 경우 스스로 취직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이 균형상태일 때는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은 없게 된다. 그러나 실업은 경제에 만연한 현상이다. 스티글리츠는 노동시장에서 고전파의 해석은 비대칭정보에 대한 가정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며,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청산(실업자나 구직자가 없어진 상태) 수준보다 높게 형성된다는 ‘효율성 임금’ 이론을 제시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높게 받을수록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게으름을 피우다 해고될 경우 상실하는 임금소득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게으르게 일하는지 감시(Monitoring)할 때 비용이 발생하므로 차라리 높은 임금을 지급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임금수준이(고전파에서 설명하는 균형임금수준인) 노동의 한계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실업이 상존함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스티글리츠는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실패 상황을 연구했다. 애비너시 디시트(Avinash Dixit)와 스티글리츠는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수리적인 모형을 개발했는데, 제품의 질적 다양성과 규모의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 수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었다. 훗날 등장한 크루그먼의 신무역이론과 폴 로머의 내생적성장이론은 이 모형의 수학적 구조를 발판 삼아 탄생할 수 있었다. 스티글리츠는 또 다른 시장실패 사례인 공공재의 공급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했는데, 공공재의 도입으로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 토지세를 징수함으로써 해당 공공재 공급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정리를 발표해 19세기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재해석했다.

스티글리츠는 클린턴 정부 시절 대통령의 경제자문으로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였고, 이후 2000년까지 세계은행에 몸담았다. 그는 후진국 경제발전 지원 및 소련의 붕괴,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 중대한 사건들의 수습 과정에서 시장지상주의적 해법이 일률 적용되는 것을 목격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IMF 차관을 받는 과정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고금리 처방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국제기구가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스티글리츠의 정치적 견해는 단순히 좌편향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만 기댈 수 없고, 정책과 규정을 더 섬세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두고 이념적으로만 대립하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셈이다. 



nabo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위원회별 통계



국제통계
(OECD·IMF 등)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www.nabostats.go.kr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03.20

06.20

09.20

12.20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NABO와 함께 즐기는 다른 그림 찾기

2024년 <예산춘추>의 NABO 독자 퀴즈는
표지 그림을 이용한 '다른 그림 찾기'로 진행됩니다.
다른 그림도 찾아보고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모두 3곳입니다.
정답자를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NABO

🔍 참여방법

이메일 접수
rosylee2024@naver.com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4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 선물 수령(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2024 <예산춘추> 두 번째 이야기 표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회의사당에서
한가롭게 봄날을 즐기는 국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를
위한 예산 만들기에 더욱 힘쓰며,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산춘추>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알찬 <예산춘추>가 만들어집니다.



일러스트
석란희 작가





건전한재정 희망찬 미래